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49-10



# 국세데이터 활용 안내서

[www.nts.go.kr](http://www.nts.go.kr)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데이터 개방·활용의 큰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고용, 복지, 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세데이터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정보로서 그 관심도와 활용 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세통계포털(TASIS),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운영하고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국세데이터가 국민 실생활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데이터 개방 및 활용 노력은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경제학자의 기고문과 일본 국세청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등으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소득세 표본자료의 온라인 공개 제도를 새롭게 수록하고 국세데이터 이용 방법과 절차,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최신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다양한 수요자가 국세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국세청 기획조정관 이 동 진





## Chapter 01 **개요**

- 03 | 1. 배경 및 목적
- 05 | 2. 용어 정의

## Chapter 02 **국세통계**

- 13 | 1. 국세통계 현황
- 14 | 2. 국세통계의 개념·근거·연혁
- 15 | 3. 국세통계 공개
- 20 | 4. 국세통계 활용
- 23 | 5. 2022년 국세통계연보 구성

## Chapter 03 **국세통계포털(TASIS)**

- 29 | 1. 개요
- 30 | 2. 국세통계포털(TASIS) 주요 서비스
  - 가. 이용자 맞춤형 분석 기능(국세통계) ..... 30
  - 나. 주요 국세통계 ..... 32



# CONTENTS

다. 유형별 국세통계 .....	35
라.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	36
마. 통계로 보는 소득 .....	37
바. 순위로 보는 세(稅)상 .....	38
사.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	39
아. 우리동네가게 .....	41
자. 국세통계상황판 .....	42
차. 카드뉴스 .....	44

## Chapter 04

### 국세통계센터

47	1. 개요
49	2. 국세통계센터 이용 및 제공자료
52	3.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53	4.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54	5. 국세통계센터 활용 사례
55	6.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인터뷰
56	7. 서식

## Chapter 05

### 데이터 결합 서비스

65	1. 개요
67	2. 데이터 결합 절차
75	3. 결합신청기관 준비사항
76	4. 데이터 결합 경진대회 우수사례
78	5.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서식
92	6. 결합전문기관 관련 서식

## Chapter 06

### 소득세 표본자료

- 101 | 1. 개요
- 102 | 2. 이용대상 및 절차
- 103 | 3. 제공자료 및 유의사항
- 104 | 4. 이용자 준수사항
- 105 | 5. 표본자료 제공항목
- 107 | 6. 서식

## Chapter 07

### 국세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

- 113 | 1. 국세기본법
- 117 | 2. 국세기본법시행령
- 120 | 3.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 129 | 4.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 139 | 5. 소득표본자료제공운영규정
- 145 | 6. 기타 법률 및 규정







# Chapter 01

## 개 요

1. 배경 및 목적	3
2. 용어 정의	5



# I 개 요

## 1 배경 및 목적

### ■ 배경

- 국세데이터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국세청은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의 공개·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데이터 공개·활용 추진 현황



- ① 수요자가 가명처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 개소 (2018년 6월, 세종)
- ②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까지 확대 (2020년 2월)
- ③ 수도권 소재 이용기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2020년 9월, 서울)
- ④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국세통계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국세통계포털(TASIS) 개통 (2021년 4월)
- ⑤ 금융위원회로부터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세통계센터에서 국세데이터와 이종(異種) 자료간 결합 지원 (2020년 12월)
- ⑥ 소득정보를 표본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나 직접 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0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
- ⑦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세통계센터에서 국세데이터와 이종(異種) 자료간 결합 지원(2022년 4월)
- ⑧ 소득세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추출하고, 개별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2022년 6월)

## ■ 목적

- 국세데이터(국세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법령상의 ‘과세정보’와 ‘통계자료’를 포괄합니다.
- 과세정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조세행정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통계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의거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분석·가공한 자료로서
  - 연 1회 국세통계연보 발간 이외에도 통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공개 실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접업종에 대한 사업자현황 월별 공개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국세통계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통계를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부터는 국세통계 포털(TASI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의 목적에 맞게 가공·분석하여 조세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과 세종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국세청과 타 기관·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각적 분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국세청 보유자료의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분석 등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표본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분석할 수 있도록 2022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분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국세통계 현황, 국세통계포털(TASIS) 및 국세통계센터 운영, 데이터 결합 서비스 등을 안내하여 국세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작 하였습니다.



## 2 용어 정의

### ■ 가명정보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서 이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 과세정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 ■ 국세데이터 (국세정보)

-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법령상의 ‘과세정보’와 ‘통계자료’를 포괄

### ■ 국세통계센터 (NTS DATA LAB)

-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과 기초자료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 국세통계시스템

-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국세통계생산·관리시스템”, “국세통계포털(TASIS)” 등을 포함

## ■ 국세통계포털(TASIS)

- 국세통계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2021년 4월 개통한 시스템으로서, 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통계로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결합물

- 가명처리된 과세정보와 이종정보를 결합한 결과물

## ■ 결합상대기관

- 결합을 요청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결합신청자와 사전협의하여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의 정보, 이용목적, 결합키 생성방법 등을 결정

## ■ 결합신청자

- 기초자료와 이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자로서, 이종정보의 제공하는 자, 이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이종정보의 제공 없이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

## ■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 ■ 기초자료 (Microdata)

-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로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되는 자료

## ■ 데이터이용기관

- 결합신청기관의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 결합신청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합신청기관이 이용기관이 되며
  - 다른 기관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활용하는 기관이 이용기관에 해당

## ■ 데이터전문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 간의 정보 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 분석결과물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물

## ■ 식별자 (Identifier)

- 전체 또는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기호 또는 번호, 기관 내·외에서 개인 간 상호 구별을 위해 부여한 번호, 기호 등을 통칭

\* (예시)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이름, 웹사이트ID 등

## ■ 이종(異種)정보

-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의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 정보 등 포함)로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

## ■ 익명정보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익명처리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 재식별

- 추가정보 또는 행위자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나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 또는 대조·비교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게 되거나, 알아보려 하는 상태 또는 행위

## ■ 적정성 평가

- 사전에 정의한 가명(익명)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익명)처리 되었는지 확인 하는 절차

## ■ 전산시스템

-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작동하는 각종 전산운용체제와 프로그램

## ■ 정보집합물

-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

## ■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등

\* 추가정보(원본정보와 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와 가명정보는 관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각각 분리하고, 접근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 통계(자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세행정 정책의 수립·평가 및 조세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 또는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총계적 수량정보

## ■ 통계사무

- 통계의 기획·개발, 생산·변경·중지, 품질 개선, 공표와 제공 등 통계와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 일체

## ■ 통계생산부서

-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 ■ 통계자료 (국세통계)

-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분석·가공한 자료

## ■ 표본자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





## Chapter 02

# 국세통계

1. 국세통계 현황	13
2. 국세통계의 개념·근거·연혁	14
3. 국세통계 공개	15
4. 국세통계 활용	20
5. 2022년 국세통계연보 구성	23





## Ⅱ 국세통계

### 1 국세통계 현황

-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로서 13개 국세(목) 및 근로자녀장려세제(EITC/CTC)·사업자현황·세수 등에 대한 통계를 공개합니다.

#### 13개 국세(목)

구 분	개 념
소득세	개인이 1년 간 벌어들인 각종 소득(근로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상속세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저가)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보유한 국내소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가가치세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과 특정장소 입장행위, 영업행위 및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주세	출고·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제조자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인지세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증권거래세	주권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국가 교통시설(도로 등)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사업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 2 국세통계의 개념·근거·연혁

### ■ 개념

- 국세통계는 외부 공개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국세정보의 분석 및 가공 절차를 거쳐 정기·비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입니다.

#### 국세통계와 비슷한 용어

구 분	개 념	근 거
국세정보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일반적·포괄적 개념 → 세법 상의 '과세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	-
과세정보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통계자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분석·가공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 ■ 근거

- 국세통계는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 1976년 12월 7일)입니다.
- 국세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공개 및 제공되고 있습니다.

###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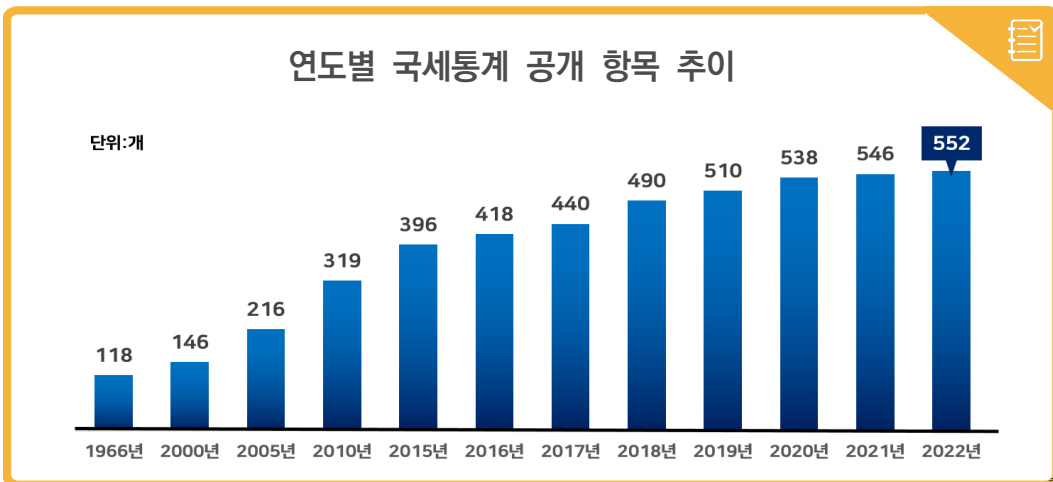
- 국세통계는 1966년 11월 20일 처음 책자(국세통계연보)의 형태로 공개되었고, 현재는 온라인(국세통계포털(TASIS) 등)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시 기	내 용
1966년 11월	「196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 '1965년도의 세법개정' 등 총 118개 항목으로 구성
1976년 12월	국세통계 작성 승인(통계청)
2006년 9월	국세통계 작성 전문 부서 신설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現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2년 12월	「2022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등 총 552개 국세통계표 공개

### 3 국세통계 공개

#### ■ 개요

- 국세통계는 전년도 소득·거래·신고 등의 전수자료를 가공·집계한 통계로서, 조세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로 발간합니다.
- 매년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2년에는 총 552개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분기별 공개

- 국세청에서는 관행화된 연말 공개의 한계를 인지하고, 2009년부터 국세통계 연보 발간 전 생산 가능한 통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는 '조기 공개'를 시행하였습니다.
- 2015년부터는 조기공개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 2021년 4월부터는 국세통계의 적시성·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보 발간(연말) 전에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09년~'20년 : 조기공개(연 2회) → '21년 이후 : 분기별 공개(연 4회)

## ■ 월별공개 (온라인 공개)

-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현황을 당월, 전월, 전년동월로 비교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매월 말일에 2개월 전 사업자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0월 : 월별 사업자현황 최초 공개 (14개 업태 및 30대 생활밀접업종)
  - 2016년 12월 : 생활밀접업종 확대 (30대 → 40대)
  - 2017년 11월 : 생활밀접업종 대폭 확대 (40대 → 100대)
  - 2018년 12월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카드뉴스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제공



## ▶ 월별 사업자현황 통계 구성

- 14개 업태 : 지역별(시·군·구), 사업자 유형별(개인·법인),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
- 생활밀접업종 : 지역별(시·군·구)

## 100대 생활업종 현황

- 생활밀접업종 : 주로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에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업종

합계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병·의원	전문직	교육	기타
100	36	12	2	13	9	5	23

- 소     매 : 가구점, 과일가게, 꽃가게, 서점, 건강보조식품가게 등
- 음     식 :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제과점 등
- 숙     박 : 여관·모텔, 펜션·게스트하우스
- 병 · 의 원 : 일반외과의원, 내과·소아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전   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 교     육 : 교습학원, 예술학원, 스포츠교육기관, 기술·직업훈련학원 등
- 기타서비스 : 가전제품수리점, 결혼상담소, 노래방, 당구장, 독서실, 목욕탕, 미용실, 스포츠 시설운영업, 실내스크린골프점, 피부관리업 등

## 국세통계 온라인 이용 방법

### 국세통계 이용 경로

경   로	인터넷 주소	공개 자료 유형
국세통계포털	<a href="https://tasis.nts.go.kr">https://tasis.nts.go.kr</a>	통계DB, 통계보고서, 체험형 콘텐츠
국세청 누리집	<a href="https://www.nts.go.kr">https://www.nts.go.kr</a>	국세통계포털(TASIS) 연계
국가통계포털	<a href="https://kosis.kr">https://kosis.kr</a>	통계DB, 통계보고서
e-나라지표	<a href="http://www.index.go.kr">http://www.index.go.kr</a>	통계DB, 통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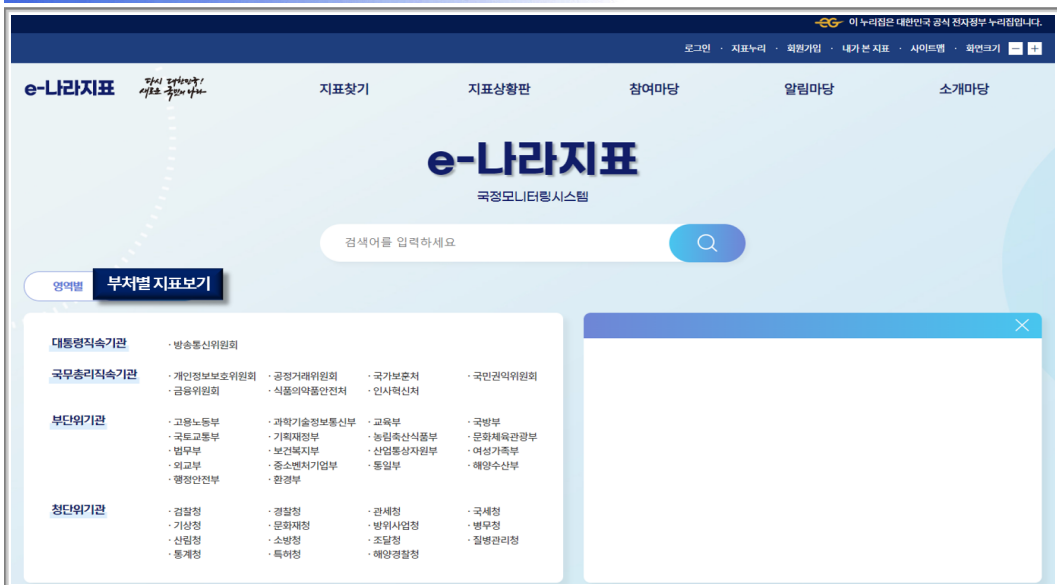
국세청 누리집

18 |  국세청

## 국가통계포털



## e-나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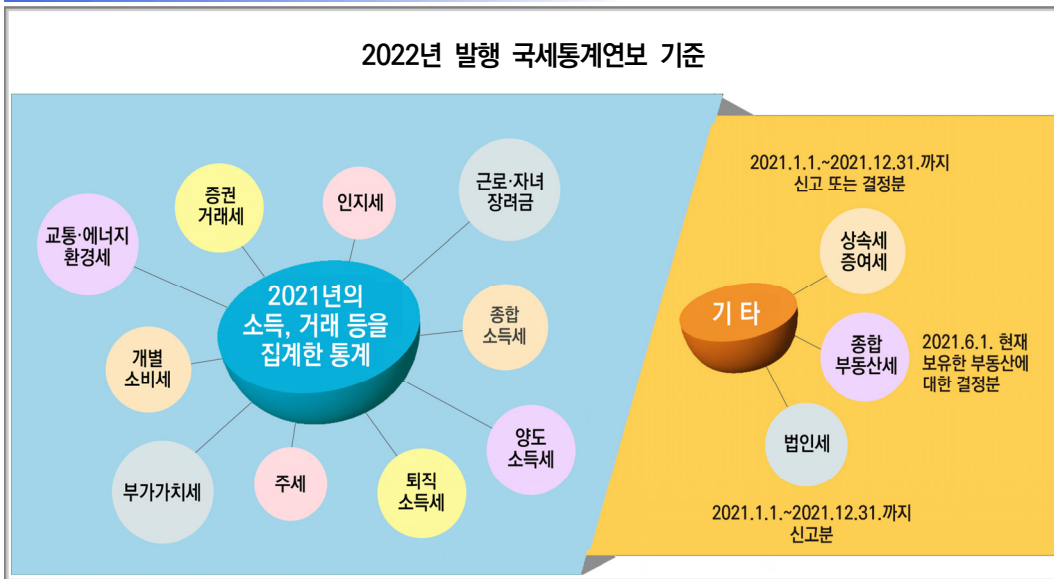
## 4 국세통계 활용

### ■ 개요

- 국세통계는 보고통계로서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한 것으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국가통계입니다.
- 2022년 발행된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결정·경정·조사·징수 및 기타 추진업무 실적의 경우에는 2021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분야별(세목별) 작성 대상기간

#### ▶ 국세통계 활용 시 수록된 통계의 대상기간



- 국세통계 이용 시, 작성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대부분의 통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야 통계는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 부동산에 대한 결정 내용 등을 집계·가공한 것입니다.



## ■ 기타사항

- 국세통계의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세통계의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통계표 하단에 주석으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별과 연령이 구분되지 않는 외국인 등의 경우 성별·연령별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로 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 통계생산을 하지 않는 항목은 ‘\*\*’로 표시하였고, 해당 계급구간의 납세자 수가 적어 개별납세자의 신고현황 등이 식별가능한 경우, 당해 계급구간을 ‘u’로 표시하였습니다.
- 각 통계표의 계수 단위는 기본적으로 금액은 ‘백만 원’, 인원은 ‘명’, 건수는 ‘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억 원’, ‘천 명’ 등의 단위로 하였습니다.
- 해당 값이 ‘0’인 경우에는 ‘-’로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모든 자료 수치는 세부 항목과 합계를 각각 반올림 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작성자, 연락처 및 2022년 통계연보 일련번호는 통계표 아래쪽에 표시하였으며,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출처 및 통계표에서 사용한 전문용어의 내용과 해설, 유의사항 등을 주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국세통계연보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해당 통계표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자료출처 : 2022년 국세통계연보,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 국세통계표의 일반 구조 (예시)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I

(1/25)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총수입금액			소득공제			납부할 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7년	④	**	**	.....	**	**	.....	**	**
2018년		**	**		**	**			
2019년		**	**		**	**			
2021년	⑤	** ⑥	**		**	**			
신고유형별 ⑦		**	**		**	**			
외부조정신고자		**	**		**	**			
...		...	...		...	...			
비사업자		**	**		**	**			
주소지별 ⑧		**	**		**	**			
서울		**	**		**	**			
...		...	...		...	...			
제주		**	**		**	**			
...		...	...		...	...			

생산부서 : OO세과(OOO 044-\*\*-\*\*\*\*) ⑨

[2022년 3-1-3] ⑩

[A]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⑪

[D] 종합소득금액에는 결손소득금액이 제외됨

① 해당 통계표의 일련번호 및 제목

② '1'은 해당 통계표의 현재 페이지, '25'는 총 페이지 수

③ 통계표 각 결과 값의 단위

④ 간편한 비교를 위하여 과거연도의 수치를 함께 표시

⑤ 해당 통계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집계한 결과

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총 인원

⑦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외부조정신고자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여줌

⑧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지역별(주소지)로 구분하여 보여줌

⑨ 해당 통계표 생산부서의 담당자 및 연락처

⑩ 해당 통계표의 일련번호

⑪ 해당 통계표의 해석을 돕기 위한 설명(주석)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①)

○ ①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②)

○ ② × 기본세율(6% ~ 42%) = 산출세액(③)

○ ③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결정세액(④)

○ ④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등) = 납부할 세액

※ 「국세통계연보」에는 각 세목별로 세액 계산 흐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5

## 2022년 국세통계연보 구성

- 2022년 국세통계연보는 13개의 내국세 등에 대하여 효율적 공개를 목적으로 15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552개의 국세통계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 분 류	중 분 류		통계표 수 (소분류)
	연 번	적 요	
총 계			552
1. 총괄	소 계		3
	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등	3
2. 징수	소 계		35
	2-1-*	세수 현황	4
	2-2-*	환급 현황	2
	2-3-*	체납액 정리 현황	24
	2-4-*	수납 현황	4
	2-5-*	납세유예 실적	1
3. 종합소득세	소 계		39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10
	3-2-*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11
	3-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4
	3-4-*	계정과목 신고 현황	9
	3-5-*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
4. 원천세	소 계		38
	4-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4
	4-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17
	4-3-*	기타 연말정산 신고 현황	3
	4-4-*	기타 원천징수 신고 현황	14
5. 양도소득세	소 계		43
	5-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12
	5-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15
	5-3-*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8
	5-4-*	기타 양도소득세 현황	8

대 분 류	중 분 류		통계표 수 (소분류)
	연 번	적 요	
6. 상속·증여세	소 계		34
	6-1-*	상속세 신고 현황	4
	6-2-*	상속세 결정 현황	9
	6-3-*	증여세 신고 현황	10
	6-4-*	증여세 결정 현황	11
7. 종합부동산세	소 계		15
	7-1-*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6
	7-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3
	7-3-*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2
	7-4-*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2
	7-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현황	2
8. 법인세	소 계		76
	8-1-*	법인세 신고 현황	10
	8-2-*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14
	8-3-*	법인세 신고 주요항목 명세서	20
	8-4-*	법인의 재무제표 신고 현황	10
	8-5-*	법인세 결정·경정 및 징수 실적	5
	8-6-*	법인 수	11
	8-7-*	공익법인	6
9. 부가가치세	소 계		89
	9-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6
	9-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7
	9-3-*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6
	9-4-*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6
	9-5-*	부가가치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7
	9-6-*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5
	9-7-*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9
	9-8-*	사업자 현황	30
	9-9-*	전자 세원관리 현황	10
	9-1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3
10. 주세	소 계		12
	10-1-*	주세 신고 현황	3
	10-2-*	주류 출고 현황	3
	10-3-*	주류 면허 현황	6

대 분 류	중 분 류		통계표 수 (소분류)
	연 번	적 요	
11. 소비제세	소 계		15
	11-1-*	소비제세 신고 현황 등	15
12. 국제조세	소 계		30
	12-1-*	외국법인 현황	9
	12-2-*	외국인투자법인 현황	11
	12-3-*	외국인 소득세 신고 현황	7
	12-4-*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1
	12-5-*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2
13. 세무조사	소 계		20
	13-1-*	세무조사 현황 등	20
14. 근로·자녀장려금	소 계		84
	14-1-*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황 총괄	1
	14-2-*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 현황	28
	14-3-*	근로·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	41
	14-4-*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현황	3
	14-5-*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현황	11
15. 기타	소 계		19
	15-1-*	납세자 권리 구제	8
	15-2-*	납세자 권리 보호	4
	15-3-*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등	7





## Chapter 03

# 국세통계포털 (TASIS)

1. 개요	29
2. 국세통계포털(TASIS) 주요 서비스	30





## Ⅲ 국세통계포털(TASIS)

### 1 개요

#### ■ 배경

- 국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2021년 4월에 개통하였습니다.

\*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https://tasis.nts.go.kr>)

- 그동안 국세청이 공개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기존의 국세통계 누리집(2014년 개통)을 통해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의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 유형별 국세통계,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통계로 보는 소득, 순위로 보는 세(稅)상 등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시계열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통계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고, 유용한 통계가 더욱 적시성 있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장에서는 국세통계포털(TASIS)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

## 국세통계포털(TASIS) 주요 서비스

TASIS 국세통계포털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TASIS안내	국세통계조회	테마통계	자료실	고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통계소개</li> <li>국세통계해설</li> <li>국세통계포털 소개</li> <li>서비스이용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통계</li> <li>⑦ 분기별공개</li> <li>월별공개</li> <li>14개 업태</li> <li>100대 생활업종</li> <li>인기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세통계</li> <li>㉡ 유형별 국세통계</li> <li>㉢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li> <li>㉣ 통계로 보는 소득</li> <li>㉤ 순위로 보는 세(稅)상</li> <li>㉥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li> <li>㉦ 우리동네가게</li> <li>㉧ 국세통계 상환판</li> <li>㉨ 카드뉴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간행물</li> <li>공지사항</li> <li>보도자료</li> <li>통계자료실</li> <li>동영상자료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AQ</li> <li>질문하기</li> <li>설문조사</li> <li>관련사이트</li> </ul>

## 가. 이용자 맞춤형 분석 기능(국세통계)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시계열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selective-choice)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시계열 선택 조회 (예시)

국세통계

국세통계조회 > 국세통계

SNS공유

통계표 목록

2-2-1. 세목별 국세...

2-2-1. 세목별 국세환급금 현황

통계표 다운로드

주석

통계표설명

연보보기

조회설정

분석

차트

발행기간

2023.202...

통계표 유형

연보형

계속형

최근시점

최근 5년 시점

소수점

자릿수

시점정렬

내림차순

오름차순

조회

항목설정

발행기간은 자료의 생산연도를 의미하며, 조회되는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발행기간을 설정하면 동일한 통계표의 연도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조회한 발행연도의 통계표 항목 및 구분들 기준으로 선택한 발행기간의 통계표를 시계열로 연계 합니다.  
(단, 각 연도별 구분명이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자료는 개별 통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속 헤더의 유형을 연보형이나 계속형으로 변경이 가능 하며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표속)과 열(표두)의 구분과 항목들을 드래그하여 이동(일괄전환)할 수 있고, 를 클릭하여 데이터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열 COL(28) X 행 ROW(69) = 1,932셀

[단위: 백만원]

열 Column

일괄1

행 Row

구분

귀속연도		2022								2021			
순번	구분	합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타		합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1	귀속연도	104,114,815	3,175,151	7,495,495	83,625,080	427,352	166,741	9,224,996	85,522,105	2,840,811	8,300,328	64,185	
2	발생액	104,114,815	3,175,151	7,495,495	83,625,080	427,352	166,741	9,224,996	85,522,105	2,840,811	8,300,328	64,185	
3	서울	34,329,665	890,505	4,720,013	26,045,597	195,308	94,774	2,383,468	26,706,817	818,718	5,536,196	17,580	
4	인천	5,345,680	194,035	210,147	4,324,226	12,745	3,065	601,462	4,510,374	168,038	161,318	3,577	
5	경기	26,943,452	931,873	1,167,172	22,985,252	98,949	24,487	1,735,719	24,167,859	810,090	1,124,693	20,223	
6	강원	1,216,405	56,797	81,360	795,452	5,623	1,203	275,970	1,096,180	45,225	117,119	648	

※ 시점설정을 선택하여 발행기간을 설정하면 여러 과세기간의 통계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계열자료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0 | 국세청

## ▶ 항목 선택 조회 (예시)

국세통계

통계표 목록 2-2-1. 세목별 국세...

2-2-1. 세목별 국세합금 현황

통계표 다운로드 | 주석 | 통계표설명

연보보기 | 조회설정 | 분석 | 차트

• 발행기간 2023.202...  
 • 최근시점 ☐ 최근 5년 시점  
 • 시점정렬 ☒ 내림차순 ☐ 오름차순

• 통계표 유형 ☒ 연보형 ☐ 계승형  
 • 소수점 자릿수

조회

항목설정

① 발행기간은 자료의 생산연도를 의미하며, 조회되는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발행기간을 설정하면 동일한 통계표의 연도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최초 조회한 발행연도의 통계표 항목 및 구분을 기준으로 선택한 발행기간의 통계표를 시계열로 연계 합니다.  
 (단, 각 연도별 구분명이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자료는 개별 통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좌측 헤더의 유형을 연보형이나 계승형으로 변경이 가능 하며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열(COL)과 열(ROW)의 구분과 항목들을 드래그하여 이동(항렬전환)할 수 있고, ▼를 클릭하여 데이터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열 COL(28) X 행 ROW(69) = 1,932셀 [단위 : 백만원]

열 선택

항목1 (7)

필터링할 항목을 입력하세요.

순번	구분	구속연도	항목1	합계	중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타
1	귀속연도	2021	합계	85,522,105	2,840,811	8,300,328	64,185	427,352	166,741	9,224,996
2	발생액	2021	합계	85,522,105	2,840,811	8,300,328	64,185	427,352	166,741	9,224,996
3	서울	2021	합계	26,706,817	818,718	5,536,196	17,580	12,745	3,065	601,462
4	인천	2021	합계	168,038	161,318	3,577		12,745	3,065	601,462
5	경기	2021	합계	810,090	1,124,693	20,223		98,949	24,487	1,735,719
6	강원	2021	합계	45,225	117,119	648		5,623	1,203	275,970
7	대전	2021	합계	71,533	70,002	815		11,642	1,265	248,208
8	충북	2021	합계	54,053	65,798	1,527		14,471	1,366	293,024
9	충남	2021	합계	92,603	172,516	4,124		17,132	4,438	448,081

※ 항목설정을 선택하면 항목과 구분을 끌어와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 ▶ 분석종류 선택 조회 (예시)

국세통계

통계표 목록 2-2-1. 세목별 국세...

2-2-1. 세목별 국세합금 현황

통계표 다운로드 | 주석 | 통계표설명

연보보기 | 조회설정 | 분석 | 차트

• 분석종류 ☒ 증감 ☐ 증감률 ☐ 누계  
 • 비교기준 ☒ 전년대비 ☐ 발행연도 선택 2022 ☐ 본자료 표시여부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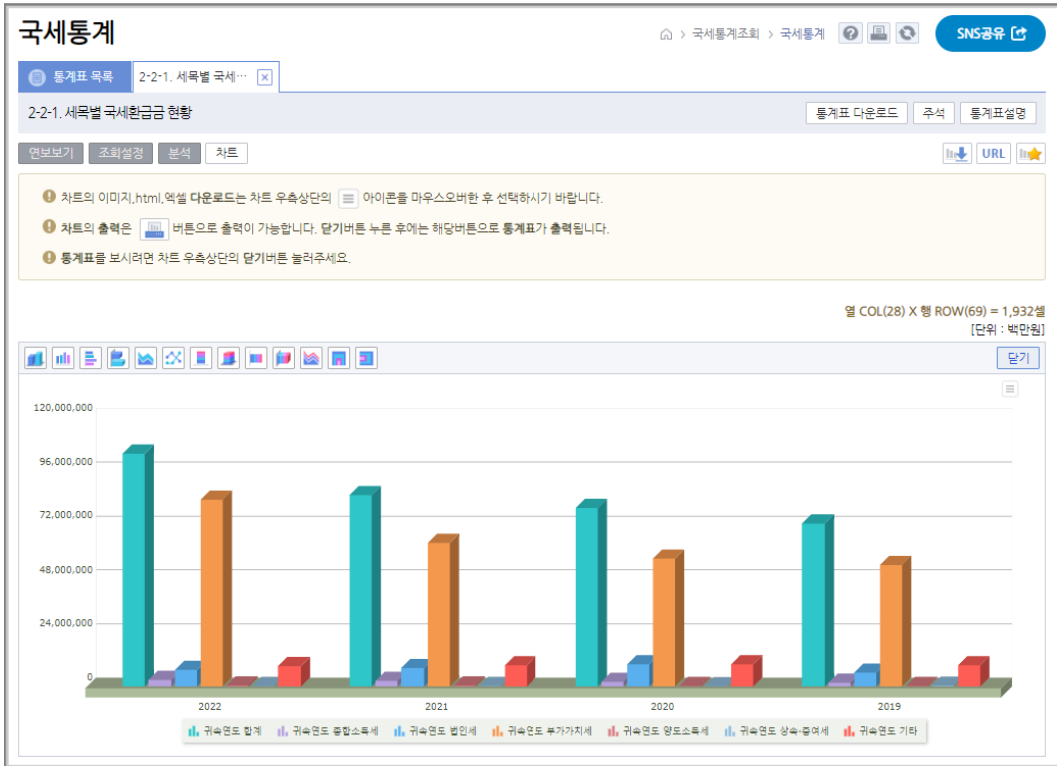
① 전년대비 또는 선택한 기준연도와의 증감, 증감률, 누계를 본자료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② 비교대상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감, 증감률, 누계 값은 '0'으로 표시됩니다.

열 COL(28) X 행 ROW(69) = 1,932셀 [단위 : 백만원]

순번	구분	구속연도	항목1	합계	중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타
1	귀속연도	2022	합계	104,114,815	3,175,151	7,495,495	83,625,080	427,352	166,741	9,224,996
2	발생액	2022	합계	104,114,815	3,175,151	7,495,495	83,625,080	427,352	166,741	9,224,996
3	서울	2022	합계	34,329,665	890,505	4,720,013	26,045,597	195,308	94,774	2,383,468
4	인천	2022	합계	5,345,680	194,035	210,147	4,324,226	12,745	3,065	601,462
5	경기	2022	합계	26,943,452	931,873	1,167,172	22,985,252	98,949	24,487	1,735,719
6	강원	2022	합계	1,216,405	56,797	81,360	795,452	5,623	1,203	275,970
7	대전	2022	합계	1,338,249	79,434	85,231	912,469	11,642	1,265	248,208
8	충북	2022	합계	2,376,860	65,947	71,908	1,930,144	14,471	1,366	293,024

※ 증감, 증감률, 누계 등 분석종류와 비교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차트 선택 조회 (예시)



## 나. 주요 국세통계

- 징수, 각종 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현황(근로자 수) 등 복잡한 국세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표이미지로 제공합니다.

### 검색 메뉴

#### 징수

-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
- 체납현황
- 납세유예 실적
- 세수현황 총괄

#### 종합소득세

-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사업소득 신고 현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 기장구분별 소득금액 확정신고 현황



## 검색 메뉴

### 원천세

- 원천세 신고 현황 (원천징수자별)
- 근로 연말정산 신고 현황 (원천징수자별)
- 근로 연말정산 신고 현황 (주소지별)
- 사업 연말정산 신고 현황 (원천징수자별)

### 상속·증여세

- 상속세 신고 현황 (납세자별)
- 상속세 결정 현황 (납세자별)
- 상속세 결정 현황 (과세유형별)
- 상속세 결정 현황 (자산종류별)
- 증여세 신고 현황 (납세자별)
- 증여세 결정 현황 (납세자별)
- 증여세 결정 현황 (과세유형별)
- 증여세 결정 현황 (증여재산종류별)

### 부가가치세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부가세 신고 현황(총괄)
- 부가세 신고 현황 (법인사업자)
- 부가세 신고 현황 (창업법인사업자)
- 부가세 신고 현황 (일반사업자)
- 부가세 신고 현황 (창업일반사업자)
- 부가세 신고 현황 (간이사업자)
- 부가세 신고 현황(창업간이사업자)
- 사업자 현황
- 가동사업자

### 양도소득세

- 양도세 결정·경정 현황 (납세자별)
- 양도세 예정신고 현황 (납세자별)
- 양도세 확정신고 현황 (납세자별)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법인세

- 중소기업 신고 현황
- 법인세 신고 현황
- 가동 법인 현황
- 가동 공익법인 현황

### 주세

- 주세 신고 현황
- 주요 주류 출고량
- 주세 신고 현황 (민속주)
- 주세 신고 현황 (지역특산주)
- 주류 제조면허 현황
- 주류 판매면허 현황

### 소비제세

- 소비제세 신고 현황(납부할 세액)
- 인지세 신고(국세청분) 현황

## 검색 메뉴

## 국제조세

- 외국법인 현황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 외국인 투자법인 현황
- 외국인 투자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외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세무조사

- 개인사업자 조사 현황
- 양도소득세 조사 현황
- 법인사업자 조사 현황
- 상속세 조사 현황
- 증여세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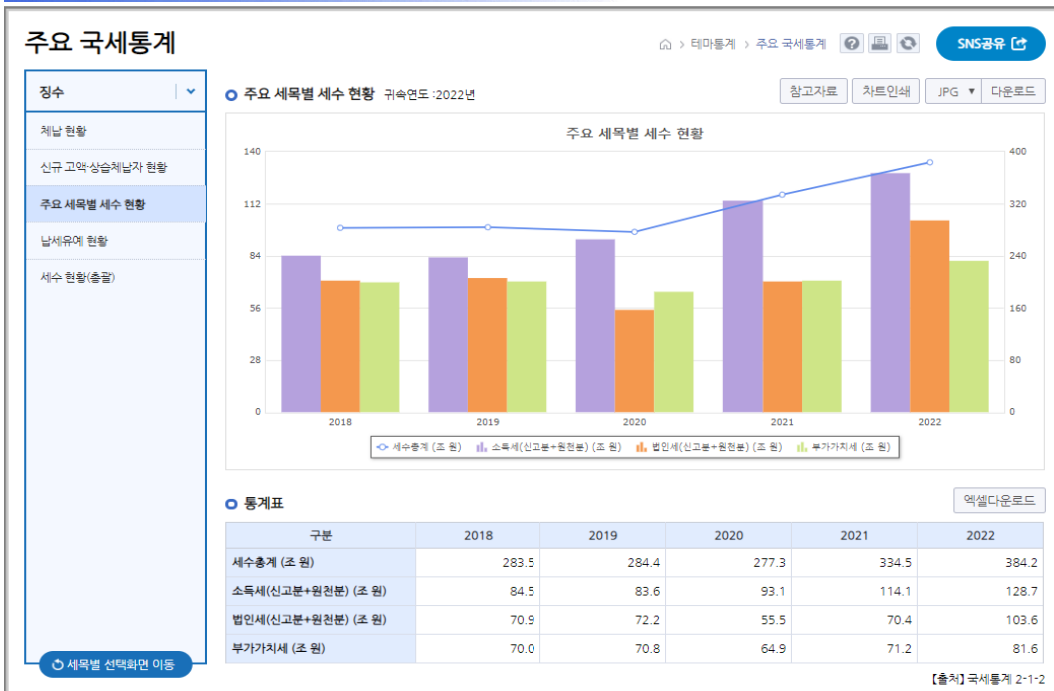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기 타

- 행정소송사건 처리 현황
-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근로자 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 이의신청 처리 현황
- 심사청구 처리 현황
- 고충민원 처리 현황

## ▶ 차트로 보는 국세통계 (예시)



## 다. 유형별 국세통계

- 지역별, 연령별, 남녀별로 세분화된 국세통계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유형별 국세통계



## 유형별 국세통계 (예시)

발행연도, 지역구분, 세목, 통계표, 지역을 선택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선택화면 이동

통계표 발행연도는 자료의 생산연도를 의미하며, 조회되는 자료는 전년도자료를 집계한 것입니다.

1 통계표 발행연도 2023

2 지역구분 시도 시군구

3 세목 경수

4 통계표

주요 세목별 세수현황

- 주요 세목별 세수현황
- 채납 현황
- 누계채납현황
- 고역·상습채납자 현황
- 국세불납 현황
- 납세유예 현황

☒ 종합소득세 (박만원)  
☐ 양도소득세 (박만원)  
☐ 법인세 (박만원)  
☐ 상속세 (박만원)  
☐ 증여세 (박만원)  
☐ 부가가치세 (박만원)  
☐ 개별소비세 (박만원)  
☐ 주세 (박만원)  
☐ 종원가려세 (박만원)

5 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원특별자치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기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남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주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구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전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산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라북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울산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라남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주특별자치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충청남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충청북도		

초기화 조회

차트

주요 세목별 세수현황 [2022년 귀속]

※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별·연령별·남녀별 통계를 막대도표로 보여줍니다.

## 라.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 100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테마통계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SNS공유

####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

- 1 업종 선택 2 연매출 입력 3 지역별 생활업종 통계 확인!!

100대 생활업종을 선택하고 연매출을 입력하시면  
지역별 생활업종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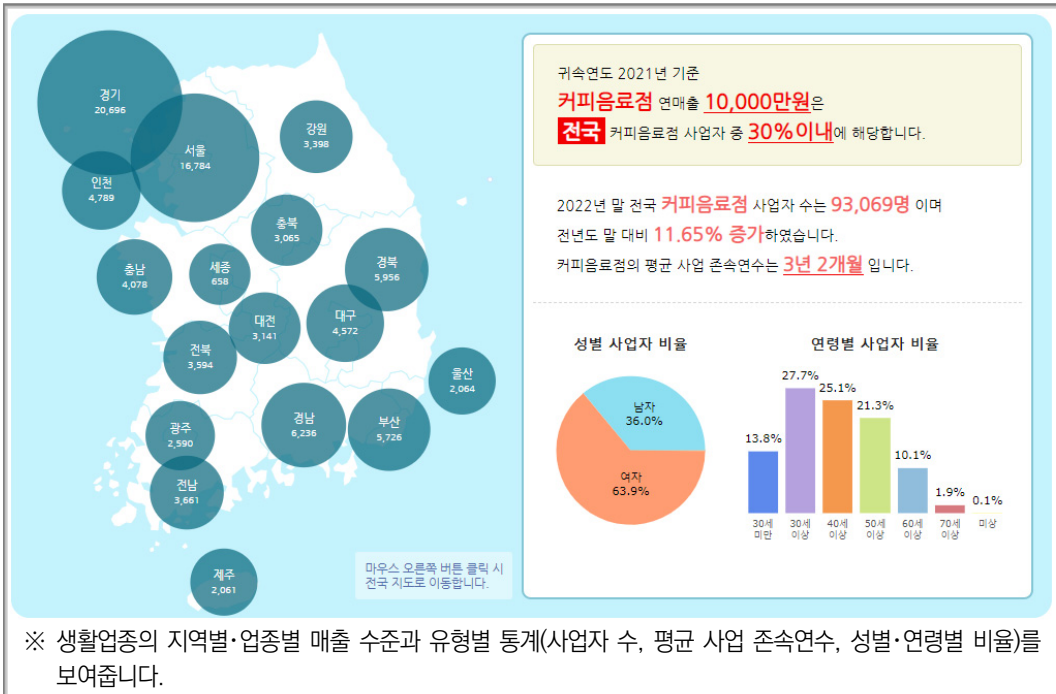
####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

- 1 지역 선택 2 연매출 입력 3 업종별 생활업종 통계 확인!!

지역을 선택하고 연매출을 입력하시면  
업종별 생활업종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예시)





## 마. 통계로 보는 소득

- 소득분야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연령별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통계로 보는 소득 (예시)

#### 통계로 보는 소득

나의 소득은 어느정도일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지도솔져

- 근로소득 :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I (원천징수지), 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II (성, 연령)
- 종합소득 :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소득구분을 선택하세요.

1단계 ☒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자

Click!

귀속연도를 선택하세요.

2단계

Click!

지역을 선택하세요.

3단계

Click!

성별을 선택하세요.

4단계 ☒ 남자 ☐ 여자

Click!

나이와 연소득을 입력하세요.

5단계   만원

Click!

초기화 결과보기

Click!

나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0대의 남자이고, 연소득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입니다.

내 소득은 전국에서는 26%이내이고, 경기도 전체에서는 27%이내, 30대 남자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35%이내입니다 (직전연도 기준) 전국에서는 25%이내이고, 경기도 전체에서는 25%이내, 30대 남자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32%이내입니다.

전국

26%

경기도 전체

27%

30대 남자

35%

경기도 고양시 30대 남자 36%이내

소득분위별 소득액 (만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① 소득 수준 조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조화 기준 : 소득구분, 귀속연도, 지역, 성별, 연령, 연소득

② 전국·시도·연령별 소득 백분위 정보가 표시되어 나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며, 게이지 도표로 보여줍니다.

- 시군구·연령·성별 소득 백분위 값을 막대도표로 보여줍니다.

## 바. 순위로 보는 세(稅)상

- 주요 지표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도별 상위 10위의 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동적도표를 제공합니다.

### 순위로 보는 세(稅)상 (예시)

순위로 보는 세(稅)상

귀속연도 2022년

1

총괄·징수

종합소득세

임천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소비세

국제조세

기타

전국[상위10위, 10년간 세수]

총괄·징수 테마통계표명 -선택-

2

체납 현황 체납발생 총액(전년도 이월액+ 당해년도 발생액)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고액체납자 신규공가자

동적차트 확인 방법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세목을 선택하신 후 테마통계명을 선택하면 해당 통계에 대한 동적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귀속연도 선택 > 세목 선택 > 테마통계표명 선택

3

전국[상위10위, 10년간 세수](단위: 억원)

총괄·징수 테마통계표명 체납 현황 체납발생 총액(전년도 이월액+ 당해년도 발생액)

Province	Amount (Billion Won)
서울	84,478
경기	72,284
인천	17,019
부산	13,397
경남	11,283
충남	7,856
전북	7,223
대구	7,023
대전	4,962
충북	4,863

2013

4

전국[상위10위, 10년간 세수](단위: 억원)

총괄·징수 테마통계표명 체납 현황 체납발생 총액(전년도 이월액+ 당해년도 발생액)

Province	Amount (Billion Won)
경기	108,906
서울	89,984
인천	22,597
경남	16,577
부산	15,724
경북	11,968
충남	11,741
대구	10,017
충북	7,811
광주	7,712

2022

1

지난 10년간의 순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2

선택한 분야를 확인한 후 세부목록에서 주요 지표를 선택합니다.

3

연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도표를 통해 해당 지표의 상위 10위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순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 지역별 국세통계와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로 나누어 시도별 국세통계 시각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국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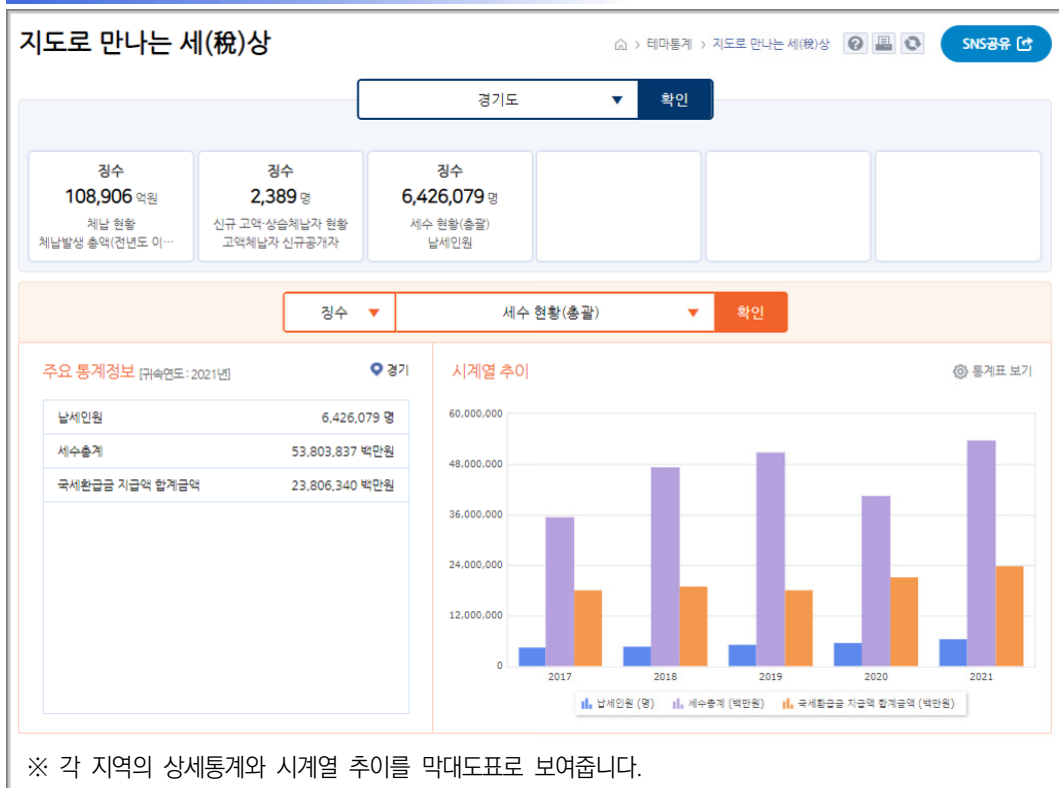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지역의 세목별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

각 세목을 선택하시면  
해당지역별 국세통계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국세통계 (예시)



##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 (예시)



## 아. 우리동네가게

- 매일 공개하는 100대 생활업종과 14개 업태에 대한 사업자 현황 통계를 시각화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 우리동네가게 (예시)

**우리동네가게**

우리동네 검색 | 업종과 업태를 선택하시면 지역별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기준연도: 2023년 08월] | 파일로 다운로드 | 상세 정보 보기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시 전국 지도로 이동합니다.

**업종과 업태 선택**

100대 생활업종 | 14개 업태

**상세 정보 보기**

100대 생활업종 > 경기도 > 업종 전체 [기준연도 2023년 08월]

사업자수: 767,666 명 | 종감률: 전년동월 대비 100.58 %

**업종전체 상위 5업종**

순위	업종명	사업자수
1위	통신서비스업	195,596명
2위	한식음식점	86,489명
3위	부동산중개업	42,819명
4위	이동통신업	26,023명
5위	실내장식가게	25,060명

**업종전체 전년동월 대비 5업종**

순위	업종명	사업자수
1위	통신서비스업	166,785명
2위	한식음식점	85,751명
3위	부동산중개업	42,950명
4위	이동통신업	25,361명
5위	실내장식가게	23,2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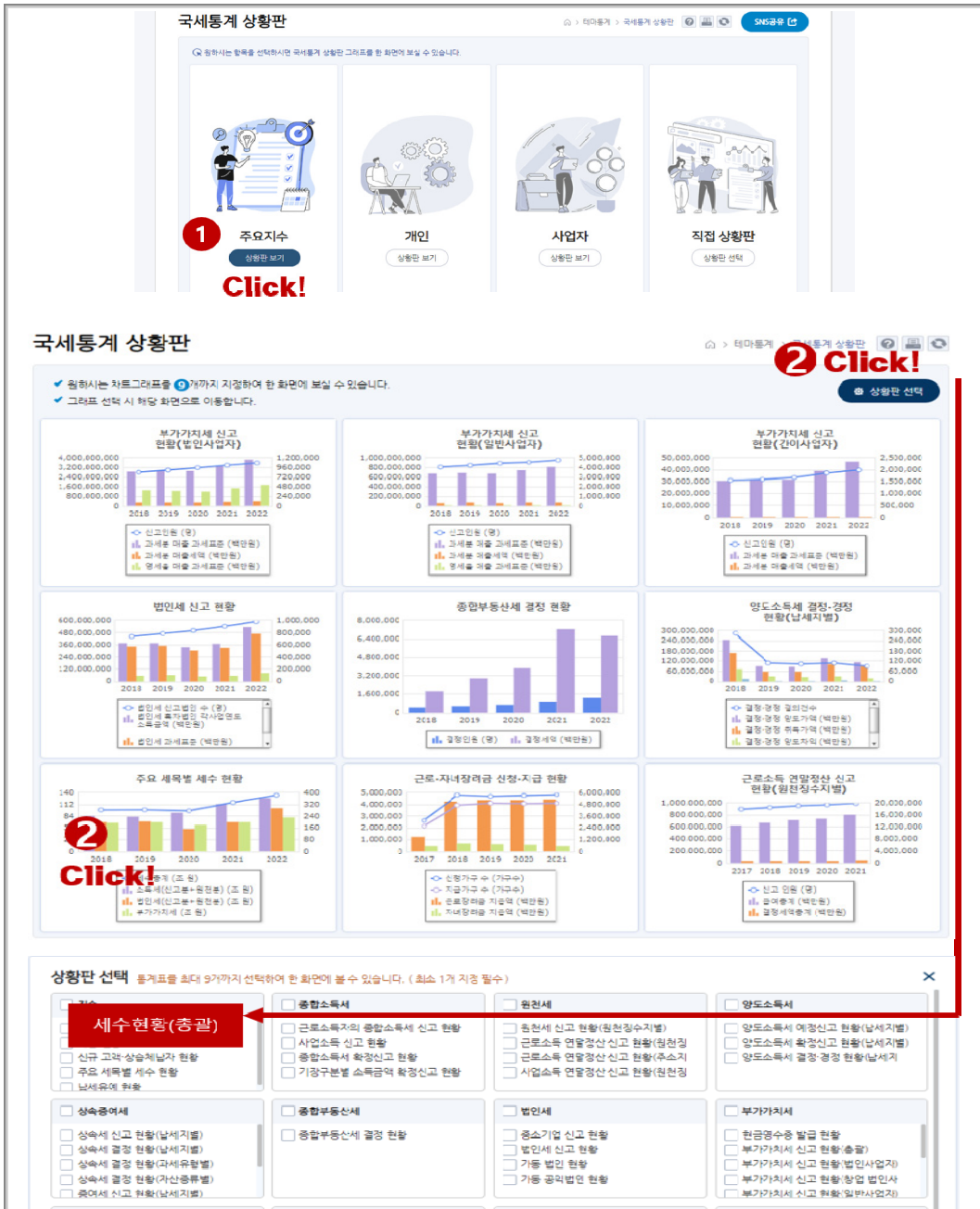
① 우리 동네에서 월별로 어떤 업종의 가게가 증감하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업태 및 업종, 지역을 선택하면 우리 지역의 사업자 수와 지도가 나타납니다.

② 우측 상단의 상세 정보 보기를 선택하면 '전년 동월 및 전월의 사업자 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감률' 등 상세정보가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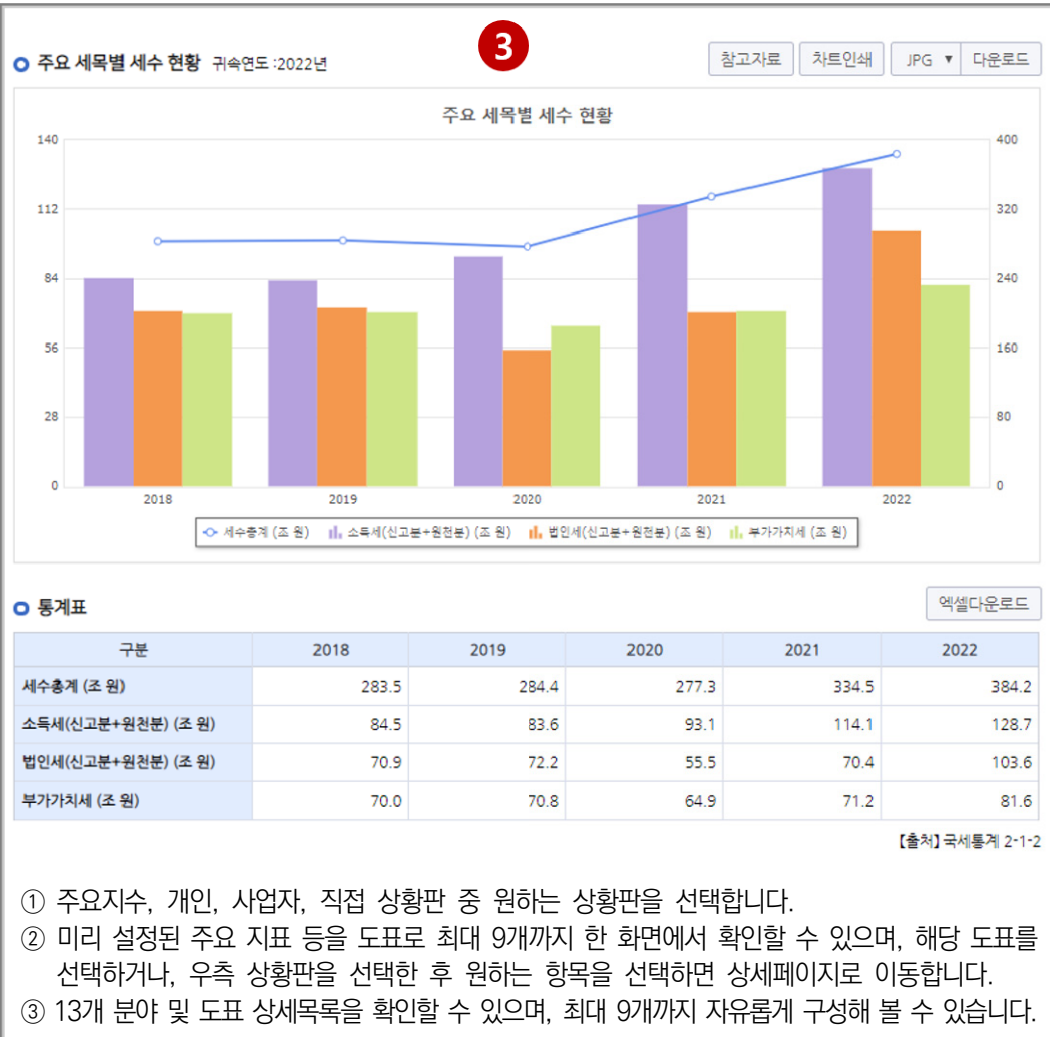
## 자. 국세통계상황판

- 주요 지표 등에 대한 도표를 최대 9개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도표를 직접 구성하여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국세통계상황판 (예시)



## 국세통계상황판 (예시)



## 차. 카드뉴스

- 그림으로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등 납세자가 관심이 많은 분야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 카드뉴스 (예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카드뉴스' (Card News) section of a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title '카드뉴스'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grid of 6 card news thumbnails. Each thumbnail has a title, a date, and a small icon. A red arrow points from the first thumbnail to a stack of 6 physical card news brochures shown below the grid. The brochures are stacked, with the top one showing the title '100대 생활업종 동향' (Trends of 100 Major Lifestyle Businesses) and the date '2023-08-31'.

**카드뉴스**

카드뉴스구분: 전체 | 카드뉴스명: [검색창] | [조회]

**Click!**

2023년 8월 기준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100대 생활업종 동향(23.8월)  
2023-10-31

2023년 10월 기준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100대 생활업종 동향(23.7월)  
2023-10-04

2023년 8월 기준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100대 생활업종 동향(23.6월)  
2023-08-31

2023년 8월 기준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100대 생활업종 동향(23.5월)  
2023-08-01

2023년 8월 기준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100대 생활업종 동향(23.4월)  
2023-08-30

2023년 8월 기준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100대 생활업종 동향(23.3월)  
2023-05-31

2023년 8월 기준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  
2023-08-31

Top 5 업종

장기도 행사





## Chapter 04

# 국세통계센터

1. 개요	47
2. 국세통계센터 이용 및 제공자료	49
3.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52
4.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53
5. 국세통계센터 활용 사례	54
6.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인터뷰	55
7. 서식	56



## IV 국세통계센터

### 1 개요

#### ■ 배경

- 국세청에서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생산 방법의 다변화와 통계작성의 기초자료인 미시데이터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국세통계센터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국세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데이터 공개·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목적

- 국세청은 조세·재정과 관련된 국세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확대를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통계센터는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 기초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데이터 결합, 맞춤형 분석 지원 등 연구자가 원활히 국세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통계센터 주요 서비스

구 분	내 용
기초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원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조세정책 평가·연구 등에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서 제공</li> </ul>
표본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li> <li>* '22.6월 소득세 표본자료 (33개 항목, 약 67만 건) 최초 공개</li> </ul>
데이터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데이터와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가능</li> </ul>
맞춤형 분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중앙행정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계표 작성, 데이터 설명 및 분석 컨설팅 제공</li> </ul>

### ■ 설치 현황

- 2018년 6월 세종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였고,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분원을 개소하였습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1층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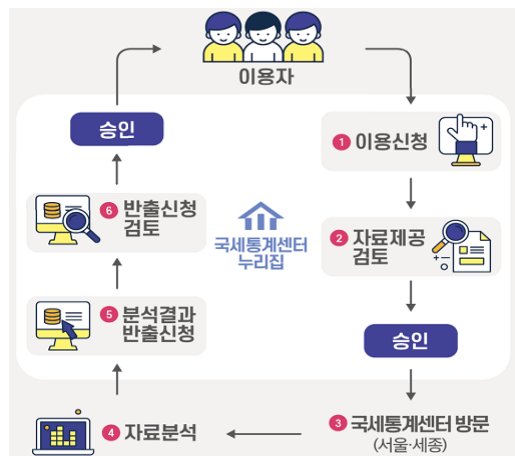


▶ (이용문의) ☎ (044) 204 - 2380, ✉ ntsdata@korea.kr

## 2

## 국세통계센터 이용 및 제공자료

- 이용자는 이용 신청 후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기초자료를 활용·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물(표, 차트 등)은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 후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원시자료의 변형·축소를 최소화한 자료를 분석·활용할 수 있으며,
- 정보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자, 이용 절차 및 제공자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의원·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의 장

3.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특수법인(한국은행 등)



## 국세통계센터 상세 이용 절차

이 용 절 차	상 세 안 내
1 국세통계센터 이용 상담	① 연구 목적에 따른 자료요청 목록, 이용방법 등 안내 및 상담 * 이용 신청 전 사전 상담 필요
2 이용 신청 및 승인	②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기간, 요청자료, 연구목적 등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 내용 등을 검토 후 승인
3 기초자료 구축	③ 이용자별 맞춤형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국세통계센터 분석 서버에 수록
4 기초자료 분석	④ 센터를 방문하여 지정받은 사용자계정으로 접속
5 결과물 반출신청	⑤ 분석 종료 후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종료신청서 및 반출 신청서를 작성·제출
6 결과물 승인·반출	⑥ 분석결과물(표, 차트 등)에 대해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 연구목적 부합 여부 등을 확인 후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개인별 계정으로 다운로드

\* 국세통계센터 이용 중 연구 계획, 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 필요

○ 이용기간 : 4주(1회 2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단, 연장 시 승인 필요)

○ 제출서류

구 분	기 본 서 류	첨부서류
신청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신청서</li> <li>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서약서<sup>1)</sup></li> <li>연구계획서<sup>2)</sup></li> </ul>
이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이용변경신청서</li> <li>이용종료신청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출신청서</li> </ul>

1) 센터 이용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2)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



## 제공자료 및 분석시스템

- **제공자료** : 9개 분야의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의 연구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맞춤형으로 구축하고 가명수준으로 비식별처리하여 제공

\* 반복 횡단면 자료, 패널 자료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시계열 : 2015년 귀속~

No	분야별	자료(데이터셋) 명
1	사업자세적	개인·법인사업자 현황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상세내역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상세, 재무제표 내역
4	법인세	법인세 신고 상세, 재무제표 내역
5	원천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연말사업)소득 신고내역
6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세내역
7	상속세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8	증여세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9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 및 지급내역

### ○ 분석시스템

- 분석도구 : R, SAS, Stata
- 프로그램 : EmEditor, Ms-Office, 한글 등
- 보 안 : VM(가상화장비)를 이용한 분석서버 접속

3

##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반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2021년 5월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기기에서도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국세통계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주요 기능

센터 이용신청  
및 반출

결합신청

소득세  
표본자료이용

- 국세통계센터 이용·변경·종료·반출 신청 처리 및 처리 현황 확인
- 최종 분석 결과물을 누리집에서 연구자가 직접 다운로드
- 데이터전문기관 이용(결합) 신청
  - \* 결합전문기관 이용(결합) 신청(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link.privacy.go.kr](http://link.privacy.go.kr))
-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신청 및 다운로드



## 4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1. 기초자료는 반드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음
2. 기초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초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함
4. 연구 중에 있는 중간결과물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이용 종료 후 반출 승인 받은 최종 분석결과물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표하여야 함
5.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함
6.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
7. 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국세통계센터 활용 사례

• 사례 1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 (연구내용) 근로장려세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노동자를 포괄하는 제도로써 국내 행정자료 중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임. 저소득층의 고용실태 파악을 통해 고용형태의 다변화 연구
- (이용기관) ○○연구원
- (이용자료) '○○년~'○○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자료
- (발행물)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 방안 연구보고서

• 사례 2 ○○○법 과징금 부과체계 실태조사

- (연구내용) 과징금 기준이 되는 ○○○법상 업태별 사업자의 매출액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현행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함
- (이용기관) ○○부
- (이용자료) ○○업종별 매출액 현황 자료(부가세)
- (발행물) ○○○법 과징금 부과체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사례 3 ○○시 ○○업종 관련 업체 통계분석 지원

- (이용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직전에 있는 ○○업계를 지원하고자 ○○시는 ○○업종 생존자금 지원 계획 수립
- (이용기관) ○○시
- (제공자료) '○○년 ○○시 소재 ○○업종 매출액 구간별 업체 수

• 사례 4 ○○○도 축제·행사 관련 업체 통계분석 지원

- (이용목적)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년부터 각종 축제·문화행사 등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관련업체 지원여부 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에 등록된 축제·행사 관련 업체 현황 파악
- (이용기관) ○○○도
- (제공자료) '○○년 ○○○도 축제·행사 관련 업체 분포 현황

## 6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인터뷰

## • 인터뷰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박사

-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기초자료를 과세제도와 조세·재정분야 정책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센터를 통한 연구경험은 연구자로서 한층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심화될 정책연구가 기대됩니다.

## • 인터뷰 2 국회예산정책처 박○○ 추계세제분석관

- 국세통계포털의 시계열 분석 기능으로 세수 추계 등 입법 지원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공개한 소득세 표본자료는 국세통계연보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인터뷰 3 서울시립대학교 이○○교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방성을 높이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국세데이터 개방 수준과 견주어 볼 때 국세청의 국세데이터 개방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 7

## 서식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통계센터 이용 신청서

## □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대표자 성명	
부 서		직위/직책/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신청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2인 이상 이용할 경우 각각 작성)

## □ 이용신청 내역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소요일수 : 일)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	- 데이터셋 : - 변수이름 :
이용 목적 (자료가 필요한 사유)	

## □ 이용신청과 관련한 연구 내역

연구명	
연구목적 및 방법론	목 적 : 방법론 :
연구결과와 출간 또는 외부공표 계획	예정일 : 방 법 :

\* 정확한 사전 심사를 위해 위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연구계획서」 별지 제출 필요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생년월일	직책/직위/직급	
휴대전화	출입기간	

상기 본인은 국세통계센터 이용과 관련한 제반 규정과 국세청 정보보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확인
1. 통계자료는 반드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으며, 분석결과물(연구 중에 있는 중간결과물 포함)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2. 통계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3. 연구결과를 언론보도,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겠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4. 연구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5. 국세청의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업무 범위 외 사용하거나, 국세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6. 국세청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7.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국세청 정보보안 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룩자료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8. 국세청 출입카드 등의 출입증을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본래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업무수행 시 항상 착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종료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출입증을 반납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9.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세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 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자료 이용 변경신청서

## □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대표자 성명	
부 서		직위/직책/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이용승인 내역

이용 자료명	
이용 기간	

## □ 변경신청 내역

1. 신청자 인적사항	부서, 직위/직급/직책,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2. 이용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소요일수 : 일)
3.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	
4. 연구 계획	
5. 기타	

## □ 변경신청 사유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국세통계센터 이용종료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대표자 성명	
부 서		직위/직책/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이용승인 내역

이용 자료명	
이용 기간	

☐ 이용종료 신청 내역

이용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소요일수 : 일)
이용 종료일	
이용 종료 사유	

☐ 이용자 안내 및 확인 사항

☞ 이용종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료일 이후의 남은 승인 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이 제한되며 모든 연구용 자료는 삭제됩니다.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분석결과물 반출 신청서

## □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대표자 성명	
부 서		직위/직책/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이용승인 내역

이용 자료명	
이용 기간	

## □ 반출신청 내역

1. 연구결과(요약)		
2. 반출신청 자료	내용 요약	
	자료 형식	1. 출력물인 경우 : 페이지 수 2. 전산File인 경우 : 제목, 유형(엑셀, 워드 등), 용량
3. 활용 계획		

## □ 이용자 안내 및 확인사항

모든 반출 신청 자료는 개별 검토 후 반출 처리하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는 반출이 불가합니다.  
(파일은 20MB 까지만 가능하며, 파일 자료는 이메일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달)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국세통계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세통계센터 이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정보보안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의 소속기관, 대표자 성명, 부서, 직위/직책/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의 영상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영상정보는 30일)
4. 귀하는 국세통계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Chapter 05

## 데이터 결합 서비스

1. 개요	65
2. 데이터 결합 절차	67
3. 결합신청기관 준비사항	75
4. 데이터 결합 경진대회 우수사례	76
5.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서식	78
6. 결합전문기관 관련 서식	92



## V 데이터 결합 서비스

### 1 개요

#### ■ 배경

-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인 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명·익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와 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면 고용·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져 공개·활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 데이터 결합

- 데이터 결합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하나의 가치있는 새로운 정보로 만드는 과정으로 보안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데이터 공개·활용 활성화 추진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평가·연구에 국세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이어 2022년 4월 비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금융·비금융 전(全)분야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 비교



구분	결합정보	근거법률	지정기관
데이터전문기관	금융기관 정보와 금융/비금융기관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결합전문기관	비금융기관 정보와 비금융기관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지정 효과



- 국세데이터와 금융·비금융 전분야의 데이터 결합 가능
-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함으로써 국세데이터의 폭넓은 활용과 안정성 확보 가능
- 데이터 결합을 통해 고용·교육·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국세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 결합 결과물의 분석·활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석공간 지원

## 2 데이터 결합 절차

### ■ 데이터 결합 절차

#### 데이터 결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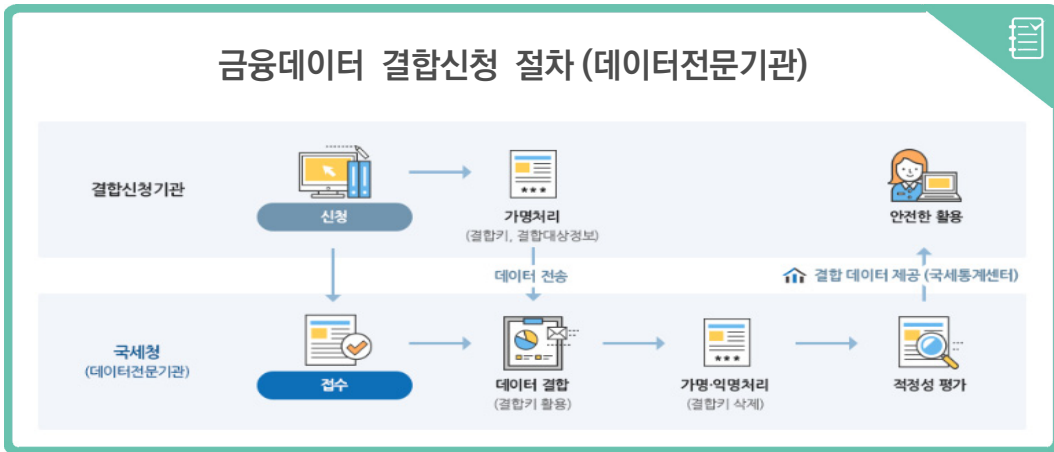
1. 결합신청기관은 결합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결합키 생성방식 등 사전 협의
  - 결합키 생성을 위한 공통속성자, 생성방식, 데이터 전송방법 등을 협의
    - ※ 과세정보와 결합이 요구되는 경우 국세청은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으로 과세정보의 활용 여부 검토 및 결합키 생성 방식 등 자료 처리에 대한 협의 필요

**(선택사항) 결합신청기관은 결합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결합물 사전 통지를 국세청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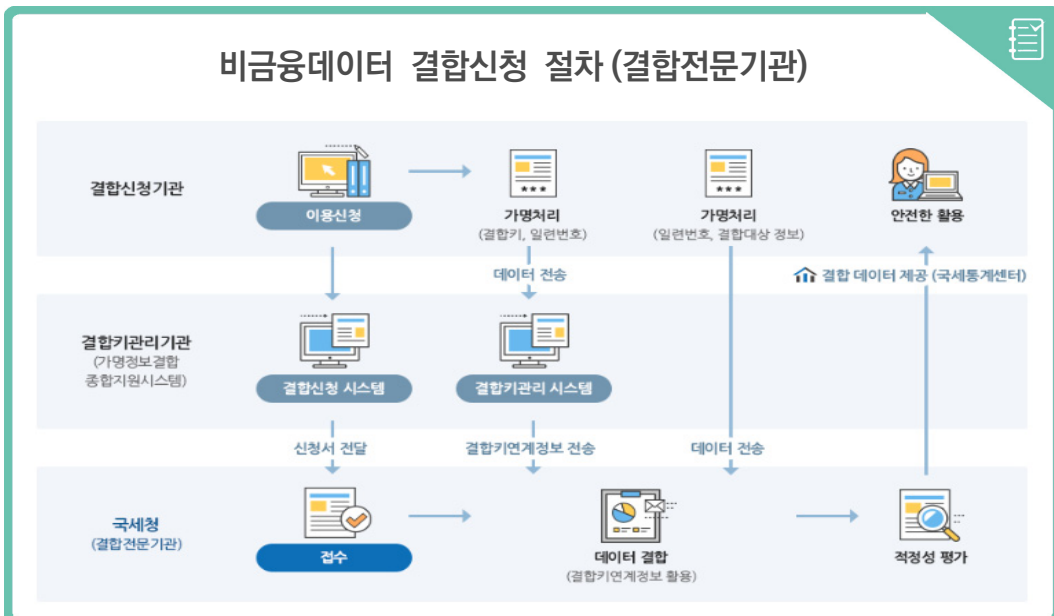
2. 결합신청기관은 국세청에 결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을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직접 전달
  - 결합신청기관은 결합 신청 전,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을 가명·익명처리
3. 국세청은 전달받은 복수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
4. 국세청은 적정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합 완료된 결합물의 가명·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정' 평가 시 결합물을 국세통계센터 분석공간으로 내부 반출<sup>1)</sup>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처리
  - 국세청은 결합대상 정보집합물 중 결합키가 서로 동일한 레코드의 속성들을 결합하고 결합키를 삭제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국세청이 결합처리한 결합물은 국세통계센터의 분석공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과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결합물에 한하여 외부반출<sup>2)</sup> 허용
    - 1) 과세정보가 포함된 결합물을 국세통계센터 분석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
    - 2) 국세청이 결합처리한 결합물을 국세통계센터 이외 공간으로 반출
5. 결합신청기관은 결합물을 수신한 직후부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재식별 방지 노력 등 사후관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
  - ※ 익명정보일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 조치 불필요

## ■ 데이터 결합 신청방법 및 절차

- 국세데이터와 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은 결합하려는 대상이 금융분야의 데이터(이하 금융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또는 결합전문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결합은 국세청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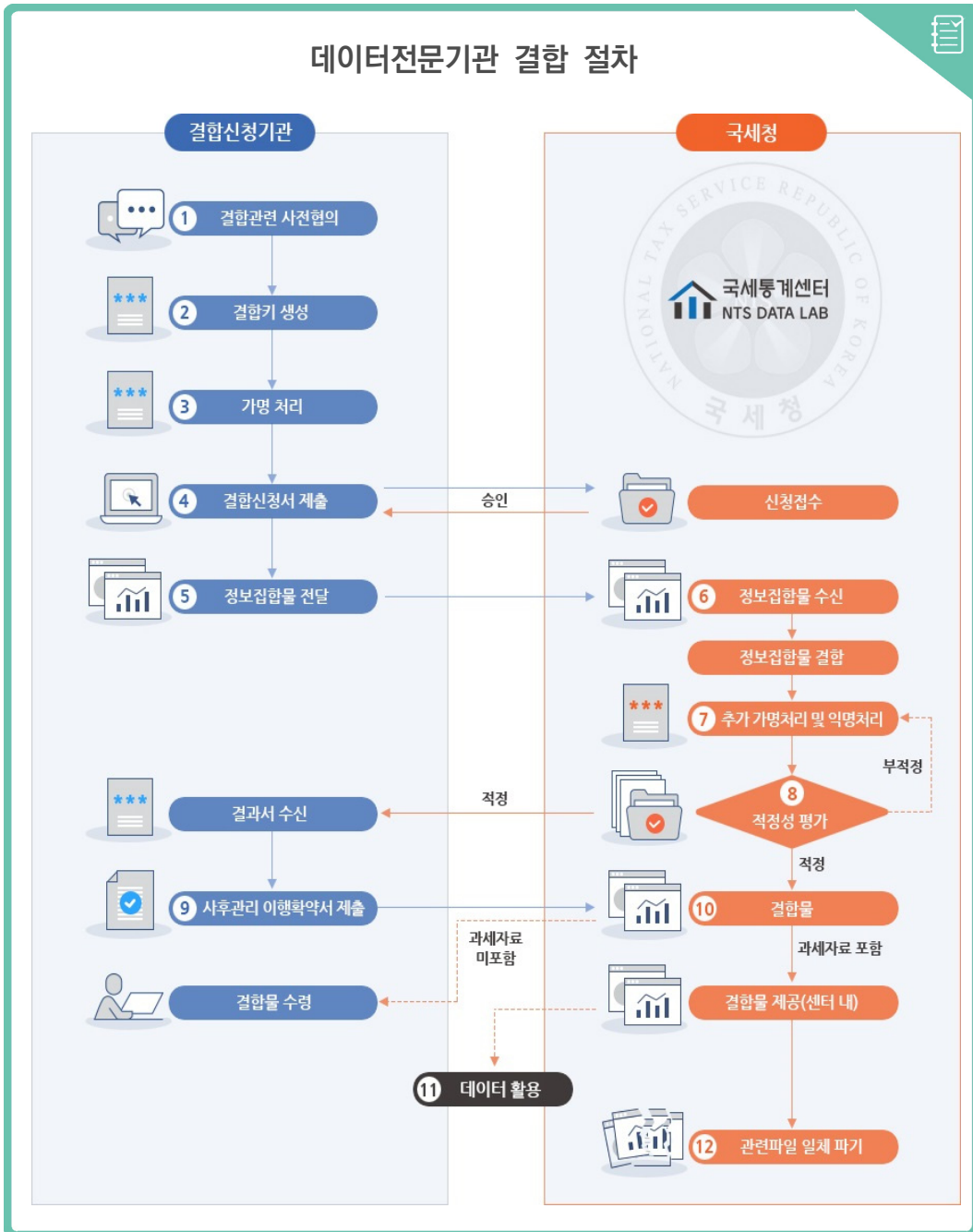


- 금융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결합은 국세청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https://link.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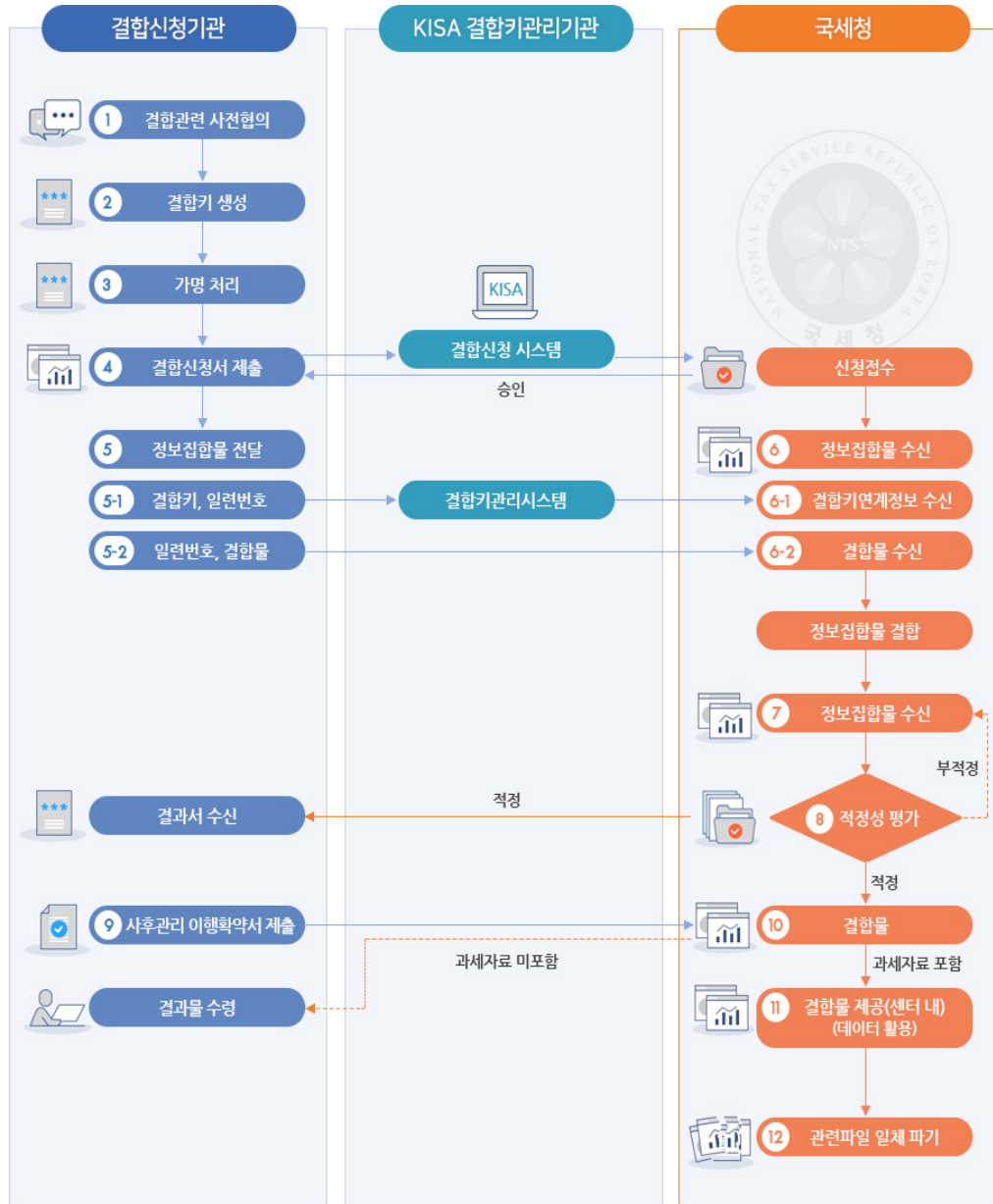




## ■ 결합 세부 절차



## 결합전문기관 결합 절차



## 1 결합관련 사전협의

결합신청기관은 결합상대기관과 결합대상 데이터 내역, 이용 목적, 결합키 생성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이용 목적에 맞는 결합대상 데이터,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 생성에 활용할 정보, 솔트값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등 활용하여 결합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생성된 결합키는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하며 다시 원본 값으로 복원할 수 없어야 합니다.

## 2 결합키 생성

결합신청기관은 사전 협의된 방식으로 결합키를 생성한 후 결합 대상 데이터에 추가

- (사전 결합률 신청) 결합신청기관은 결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결합률 사전통지 신청서(붙임 1)를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 3 가명 처리

결합신청기관은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및 하위규정 등 결합신청기관의 신청(목적)에 따라 결합 대상 데이터를 가명처리

## 4 결합신청서 제출 및 접수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는 복수의 결합신청기관은 각각 결합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물 이용기관 모두 결합신청기관이며 결합신청기관은 각각 공문을 통해 결합신청서를 국세청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결합 전문기관이자 데이터 보유기관으로 결합신청서 제출 필요

- 결합 신청 시, 결합신청기관은 데이터 결합 신청서(붙임 2)와 함께 사전 가명처리 수행 약약서(붙임 3), 보안서약서(붙임 4), 데이터 명세서(붙임 5) 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합신청기관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결합하려는 데이터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데이터 기초정보, 가명처리 현황, 개인식별가능정보 빈도수 등을 포함한 자료
- 국세청은 결합신청서를 접수하고, 결합신청 승인여부를 결합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첨부서류 보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승인통보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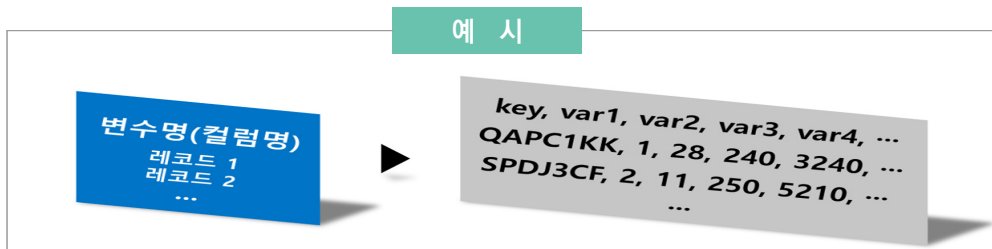
### 결합키 생성

결합신청기관은 국세청이 사전 배부하는 보안USB, 파일 암호화, 암호화된 통신망 등 안전한 방법으로 결합 대상 데이터를 국세청에 직접 전달

- 복수의 결합신청기관인 경우에는 결합대상 데이터를 보안USB, 파일 암호화, 암호화된 통신망 등 안전한 방법으로 대표결합신청기관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보유기관은 데이터가 아래와 같은 형식이 되도록 생성하여야 함

- 파일형식 CSV, 인코딩 방식 UTF-8
- 헤더(컬럼명) + 레코드(결합키, 변수1, 변수2, 변수3, 변수4 ...)



## 6 데이터 수신 및 결합

국세청의 결합업무 처리자는 데이터를 전달받은 즉시 결합시스템에 업로드 후 결합업무 수행

## 7 결합키 생성

데이터를 결합한 후 결합신청기관의 선택에 따라 추가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수행

- 결합 결과는 '완료', '중단', '실패'로 결정하며 메일 또는 유선으로 결합신청기관에 통보합니다.

※ 결합 결과가 '중단', '실패'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며 결합신청기관에 결합 결과를 통보하고 데이터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음

## 8 적정성 평가

국세청은 결합물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 후 결합신청기관에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전달

- 국세청은 결합 결과가 '완료'인 경우 결합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후 적정성 평가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 결합신청기관이 희망하는 결합물의 형태(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따라 적정성 평가 절차·방법 및 소요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9 반출신청서 등 제출

결합신청기관은 결합물(가명정보)을 반출·활용하고자 할 경우 결합결과물 반출 신청서(붙임 6)와 사후관리 이행 협약서(붙임 7)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익명정보로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세통계센터로 반출하는 경우' 사후관리 이행협약서 제출 불필요

## 10 결합물 제공 및 수령

국세청은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결합물을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기관에 전달

11

## 데이터 활용

결합신청기관은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가명정보를 결합 및 평가 단계에서 기재한 이용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수행

- (국세데이터가 포함된 결합물) 데이터 결합물은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세통계센터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결합물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통계센터 이용규정에 의해 분석결과물(통계표, 도표 등)에 한해 승인을 득한 후 반출 가능
- (국세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결합물) 외부 반출을 신청하여 결합물을 수신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및 관련 하위규정 등에 따라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삭제, 재식별 시도금지 등 사후관리(가명정보 관리 환경 및 이행 협약서(붙임 8) 제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2

## 자료 폐기

국세청은 결합업무 종료 즉시 결합물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 처리

### 3 결합신청기관 준비사항

#### 가. 결합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 (결합관련 정보 공유) 결합 신청 전 결합 대상 데이터 상세 내역, 이용 목적, 국세통계센터 이용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결합키 생성) 결합키 생성 시 활용할 정보, 생성 알고리즘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명처리 기법) 가명(익명)처리의 이용목적, 결합 완료된 정보 이용기관의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가명처리 기법 등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나. 결합신청서 제출 시에 결합대상 데이터 명세서, 사전 가명처리 수행 확약서, 보안서약서 제출 필요

#### 다. 결합대상 데이터 전달 및 추가보완에 대한 준비

- 결합신청기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따라 결합대상 데이터를 국세청에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합신청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서 또는 데이터 관련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완하여 국세청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4

## 데이터 결합 경진대회 우수사례

• 사례 1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21년 결합 우수사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인층의 소득불안정과 빈곤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
- 공·사연금 등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종합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노후소득보장 관련 각종 행정데이터를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사회보장제도 가입 및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결합데이터

구분	데이터 개요	데이터 제공기관
공공	소득정보, 세대·인적정보, 국민·기초·공무원 등 연금 정보	국세청, 행안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민간	퇴직연금 정보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 6개 기관

결합기관 : 국세청

###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폐암환자 1만4천여 명 중 1년 이내 사망은 38.2%, 3년 이내 사망은 67.3%, 5년내 사망은 77.4%, 10년 이내 사망은 87.5%로 분석됨
- 폐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 후 연구대상기간 내 사망한 환자의 22.2%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24.8%를 차지함
- 향후 폐암 환자의 단기·중기·장기 사망원인 및 연도별 사망동향을 파악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폐암 환자에서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 ● 사례 2 서울복지실태조사와 행정데이터 결합('22년 결합 아이디어)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복지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부분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시 정확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가필 요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구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움
- 2년 주기로 조사한 서울복지실태조사와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존 사회조사 방법을 개선하고 실태조사의 소득조사 결과를 보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 ■ 결합데이터

데이터 개요	데이터 제공기관
과세정보, 근로자녀장려세제 정보	국세청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 정확한 소득 및 자산 데이터를 통해 정책대상자 규모 및 예산추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서울의 빈곤과 불평등을 파악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음
- 각종 지역조사에 좋은 선례로써 행정자료 활용 확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서식

## 정보집합물 결합률 사전통지 신청서

# 정보집합물 결합률 사전통지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수일	미기재
신청 기관명	기관 명칭	담당자(성명)	
	신청부서	전화번호	
	소재지	E-mail	
결합 상대 기관명 (복수기재 가능)	기관 명칭		
	신청부서		
	소재지		
신청 내용	정보집합물 주요내용 요약	[신청기관] 간략히 서술 (예시 : 16년 서울지역 A카드 구매내역)	
		[결합상대기관] 간략히 서술 (예시 : 16년 서울지역 B은행 거래내역)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예정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업무 관련 정보 요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합률 사전 통지 후 3년까지

위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합신청 기관	기관명	담당자(성명, 직함)	
	담당부서	전화번호	
	소재지	이메일 주소	
결합상대 기관 (복수기재 가능)	기관명		
	담당부서		
	소재지		
결합목적		상세히 서술	
정보집합물 주요내용 요약		예시 : 00년 0월 A은행의 대출내역	
결합 데이터 제공형태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이용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input type="checkbox"/>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결합키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대체
	<input type="checkbox"/> 익명정보		
이용장소	<input type="checkbox"/> 국세통계센터 <input type="checkbox"/> 이용기관 (                      )		
이용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인(기관장명)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보집합물에 대한 사전 가명처리 수행 확인서 2. 정보집합물의 데이터 명세서 3. 보안서약서			

• 붙임 3

정보집합물에 대한 사전 가명처리 수행 약약서

제 호

## 정보집합물에 대한 사전 가명처리 수행 약약서

국세청장 귀하

본 결합신청기관은 국세청에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에 대한 사전 가명처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를 준수·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약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 • 부록 4

## 데이터전문기관 보안서약서

## 보안서약서

본인은 20\_\_년\_\_월\_\_일부터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결합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업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국가업무의 중대한 위해(危害) 행위임을 자각합니다.
3. 본인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결합신청자 준수사항 및 결합 자료 이용에 대하여 보안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 종료 후에도 이용 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비밀누설, 타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국세청 정보보안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룩자료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국세통계센터 출입카드 등의 출입증을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본래의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업무수행 시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종료시에는 반드시 국세통계센터에 출입증을 반납하겠습니다.
9. 본인은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위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붙임 5** 정보집합물 결합 기초자료 (예시)

## 1. 기초자료 작성 항목

데이터명세	결합신청기관명	필수
	원본 데이터 크기(레코드 수)	필수
	원본 데이터 생성 방법	필수
	원본 데이터 세부 항목별 명세 (범위, 개수 등)	필수
	원본 예시(표)	필수
	(익명처리된)평가 대상 데이터 세부 항목별 명세	필수
	평가 대상 데이터 (예시 또는 일부 레코드도 가능)	필수
가명(익명) 처리 현황	식별자, 개인식별가능정보 등 구분	필수
	적용된 가명(익명)처리 기준(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등) 및 수치	필수
	가명(익명)처리 기법·세부기술	필수
이용기관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	필수

※ 위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가명(익명)처리 적정성평가위원회에 제출

※ 분량 제한 없음

## 2. 기초자료 개요(작성예시 포함)

※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아래의 개요에 맞게 작성하되 분량 제한 없음

### 1) 데이터 명세

#### 가) 원본 데이터 특성

항 목	내 용
결합신청기관명	A카드
데이터 크기(용량)	20.5 GB
데이터 레코드 수	25,000,000
데이터 컬럼 수	20
데이터 생성방법	2019년~2020년 A카드 이용자에 대한 카드상품 신청/이용/탈퇴 등의 내부정보 및 외부조회정보
결합데이터 활용 목적	B은행의 신규 신용카드 결합상품 개발 시 참고하기 위한 통계 작성
결합데이터 이용기관	B은행

## 나) 정보 개요

No	정보영역	항목건수	비중	정보영역설명
1	ID	1	5.0%	일련번호
2	신청정보	6	30.0%	'19~'20년 A카드 여신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정보
3	결제정보	8	40.0%	'19~'20년 A카드를 통한 결제정보
4	대출정보	2	10.0%	'19~'20년 A카드 대출/상환과 관련된 정보
5	기타정보	3	15.0%	'19~'20년 A카드 이용자의 개인 소득정보
Total		20	100.0%	-

## 2) 가명처리 내역

## 가) 가명처리 개요

가명처리 방법			
No	자료속성	처리방법	설명
1	전체 변수	샘플링	전체 데이터 50% 샘플링 적용
2	식별자	삭제	주민등록번호, 성명 삭제
3	개인식별 가능정보	범주화	연령, 주소, 날짜관련 변수 범주화
4	결제정보	라운딩, 상단코딩	금액 관련 변수 라운딩, 상단코딩
5	대출정보	범주화, 라운딩, 상단코딩	대출관련 변수 범주화, 라운딩, 상단코딩
6	기타정보	라운딩, 상단코딩	금액 관련 변수 라운딩, 상단코딩

## 나) 정보항목별 상세

					가명처리 방법					예시	
No	컬럼명	자료속성	자료형태	항목설명	가명 처리1	단위/ 기준	가명 처리2	단위/ 기준	미적용 사유	처리 전	처리 후
1	ID	-	-	작성불요	작성 불요	작성 불요	작성 불요	작성 불요	작성불요	작성불요	작성 불요
2	연령	신청 정보	수치형		상단 코딩	90				99	90
3	성별	신청 정보	범주형						성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적용	-	
4	직업코드	신청 정보	범주형	○○기관의 직업코드 활용					직업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적용	-	
5	신청일자	신청 정보	수치형		범주화	월				20200815	202008
6	계좌개설 일자	신청 정보	수치형		범주화	월				20200729	202007
7	개설상품 건수	신청 정보	수치형						재식별 위험성 낮음	-	-
8	KK 카드상품 결제금액	결제 정보	수치형	A카드의 KK카드상품	라운딩 (절삭)	10000				77,985	70,000
9	MM 카드상품 결제금액	결제 정보	수치형	A카드의 MM카드상품	라운딩 (절삭)	10000				77,985	70,000
10	카드대출 연체액 등급	대출 정보	범주형	전체 카드대출 상품 연체액을 15000단위로 1~7까지로 범주화	범주화	15000				222,000,000	7
11	카드대출 상환액	대출 정보	수치형	전체 카드대출상품	라운딩 (절삭)	10000	상단 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12	소득금액	기타 정보	수치형		라운딩 (절삭)	10000	상단 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13	건강 보험료 납부액	기타 정보	수치형		라운딩 (절삭)	10000	상단 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14	지방세 납부액	기타 정보	수치형		라운딩 (절삭)	10000	상단 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 3) 주요변수 분포현황

#### 가) 범주형 변수 분포현황(빈도수 3 이하 또는 하위 10개 항목 표기)

※ 최종 제출하는 데이터 중 민감 또는 주요 정보에 대하여 작성하며, 평가 중 추가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컬럼명	컬럼값	세부 설명	빈도수
직업코드	13571	금융업	1
	13572	건설업	1
	13673	서비스업	1
	13784	유통업	2
	24955	정보통신업	2
	24956	농업	3
	34007	수산업	3
카드상품코드	AA	교육	3
	BB	의료	3
	CC	마트	3
	DD	통신	3
	EE	외식	3
	FF	문화·레저	3
	GG	쇼핑	3

#### 나) 수치형 변수 분포현황

※ 제출하는 데이터 중 민감 또는 주요 정보에 대하여 작성하며, 평가 중 추가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컬럼명	최소값	1분위수 (25%)	2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75%)	최대값
개설상품 건수	0	5	13	20	25
KK카드상품 결제금액	0	10,000	40,000	70,000	77,985
MM카드상품 결제금액	0	25,000	850,000	270,000	8,726,500
카드대출 상환액	0	100,000	250,000	500,000	100,000,000
소득금액	0	12,000,000	38,000,000	89,000,000	123,456,000
건강보험료 납부액	0	100,000	250,000	500,000	222,000,000
지방세 납부액	0	100,000	250,000	500,000	334,000,000

## • 붙임 6

## 결합결과물 반출 신청서

결합결과물 반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반출신청 기관	기관명	담당자(성명,직함)		
	담당부서	전화번호		
	소재지	이메일 주소		
결합목적		상세히 서술(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중 가명처리 예시(p.32~39) 참고)		
결합 결과물 주요내용 요약		예시 : 00년 0월 A은행의 대출내역		
결합 결과물 제공형태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이용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 포함) <input type="checkbox"/>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결합키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대체	
	<input type="checkbox"/> 익명정보			
이용정보		<input type="checkbox"/> 국세통계센터 <input type="checkbox"/> 이용기관 (                      )		
이용자 안내 및 확인사항		반출 가능한 모든 자료는 과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인 경우만 반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는 반출이 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반출신청인(기관장명)                      (서명 또는 인)    <b>국세청장 귀하</b> </div>		
첨부서류		1.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		

• 붙임 7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

제 호

##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

국세청장 귀하

본 결합신청기관은 국세청이 결합하여 제공한 가명정보를 활용하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규정 등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준수·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 가명정보 관리 환경 및 이행 약속서

세부 지표	체크
<b>① 가명정보 활용 계획</b> ※ 가명정보 분석 등 처리에 외부 전문가, 자회사,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외부 처리 위탁' 선택	<input type="checkbox"/> 내부 활용 <input type="checkbox"/> 외부 처리 위탁 <input type="checkbox"/> 제3자 제공
<b>세부 내용</b>	
가명정보 내부 활용 목적, 외부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기술	
<b>②</b> 이용기관은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계획에 대한 자체 적정성 심의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적정성 심의 절차가 있는 경우 심의 위원회 구성, 심의 기준 및 결과, 심의 기록 보관 현황 등에 관해 기술	
<b>③</b> 이용기관은 개인(신용)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 보안 조직과는 구분된 개인(신용)정보보호 전담 팀·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전담조직의 규모, 가명정보 생성·처리 및 관리 과정에서 전담 조직의 역할 등에 관해 기술	
<b>④</b> 이용기관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을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신용정보관리·보호인(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위, 역할, 권한, 겸직 여부 등에 관해 기술	

세부 지표	체크
<p>⑤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필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관한 사항</li> <li>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가 저장 또는 처리되는 시스템·단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i> <li>3.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li> <li>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li> <li>5.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방지 및 재식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li> <li>6.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li> </o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내부관리계획 전사 공포 방법, 내부관리계획 제·개정 시 결재권자 등에 관해 기술</i>	
<p>⑥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관련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있음 (필수)</p> <p>※ 가명정보 관련 내용이 추가된 내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이행실태점검이 있었던 경우 “예” 선택</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점검 예정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된 주기, 절차, 사후관리 방안 등에 관해 기술</i>	
<p>⑦ 이용기관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원본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있음</p>	<input type="checkbox"/> 원본정보를 보관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분리 <input type="checkbox"/> 논리적 분리
<b>세부 내용</b> <i>가상머신 분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분리 등 구체적인 분리 저장 방안에 관해 기술</i>	
<p>⑧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접근 시 DB·서버 접근통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접근통제 시스템의 종류, 적용 대상 시스템 및 권한 관리 방안, 인증시 MFA 적용 여부 등에 관해 기술</i>	
<p>⑨ 이용기관은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를 분석·활용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사용 단말기와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p>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분리 <input type="checkbox"/> 논리적 분리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단말기 분리 운용 현황(물리적 분리의 경우), 구체적 분리 방법(논리적 분리의 경우), 분리된 망의 연계 데이터 이동 절차 등에 관해 기술</i>	

세부 지표		체크
<b>10</b>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접근 권한 부여 시 관리자의 승인(전자·서면결재)을 명시적으로 득한 후 부여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결재권자, 신청 및 승인 절차, 결재 기록 보관 등에 관해 기술</i>		
<b>11</b>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접근 가능 직원이 가명처리 전 원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필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예외적으로 가명정보 접근 가능 직원이 책임자의 승인하에 일시적으로 원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 가능 기간 설정, 승인 절차 등에 관해 기술</i>		
<b>12</b>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시 해당 기록이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기록·보관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행위자, 대상자, 승인자, 변경 정보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대상 시스템 및 기록·보관되는 구체적 정보, 보관 기간 등에 관해 기술</i>		
<b>13</b> 이용기관은 가명정보에 접근할 때 마다 접근자, 접근 시간 등 접근기록이 자동으로 기록·보관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접근자(ID 또는 직원정보 등), 접근 시간, 행위 정보(query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대상 시스템 및 기록·보관되는 구체적 정보, 보관 기간, 무결성 방지 대책 등에 관해 기술</i>		
<b>14</b> 이용기관은 추가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음 (필수)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분리 <input type="checkbox"/> 논리적 분리
<b>세부 내용</b> <i>추가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암호화, 분리 보관 방법에 대해 기술</i>		

세부 지표	체크
<b>15</b>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여 가명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있음 <b>(필수)</b> 1.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연간 교육 계획 수립 절차 및 전결권자, 교육 이력 및 교육 계획, 가명정보 관련 커리큘럼 등에 관해 기술</i>	
<b>16</b> 이용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보존 기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있음 <b>(필수)</b>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본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보존 기간, 목적 달성 기준, 주기적 재검토 계획 등에 관해 기술</i>	
<b>17</b> 이용기관은 가명정보 오·남용에 대한 별도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b>(필수)</b>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세부 내용</b> <i>오·남용 행위 식별, 제재기준 적용 절차 등에 관해 기술</i>	

본 **(결합신청기관명)**은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국세청이 결합하여 제공한 가명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감독규정 제43조의7) 및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감독규정 [별표8])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신청인(기관장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6

## 결합전문기관 관련 서식

## • 붙임 1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

<b>결합 신청서</b>				신청번호	
				접수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결합 개요					
전체 결합신청기관명	총 기관 수	<input type="checkbox"/> 개 기관			
	기관명				
반복결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추가(결합접수번호 : )				
추가절차 신청	결합률 확인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추출 <input type="checkbox"/> 모의결합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제공자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제출 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지원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결합 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				
가명정보 제공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 e-mail)			
결합정보 이용자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결합 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input type="checkbox"/>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 결합 목적					
분석공간 이용	<input type="checkbox"/> 추가 가명처리 <input type="checkbox"/> 결합정보 분석 <input type="checkbox"/> 이용안함				
지원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반출 전 처리 <input type="checkbox"/> 분석				
결합정보 이용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 e-mail)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확약서 2. 보안서약서 3.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 • 붙임 2

##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확약서

##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확약서

제 기관명-2023-000 호

국세청장 귀하

본 신청자( )은/는 귀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하여 제공한  
가명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가명정보처리가이드  
라인」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기관/소속 :

신청자/성명 :

직인

# 보안서약서

본인은 20\_\_년\_\_월\_\_일부터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결합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업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국가업무의 중대한 위해(危害) 행위임을 자각합니다.
3. 본인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결합신청자 준수사항 및 결합 자료 이용에 대하여 보안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 종료 후에도 이용 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비밀누설, 타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국제청 정보보안 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룩자료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국제통계센터 출입카드 등의 출입증을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본래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업무수행 시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종료시에는 반드시 국제통계센터에 출입증을 반납하겠습니다.
9. 본인은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위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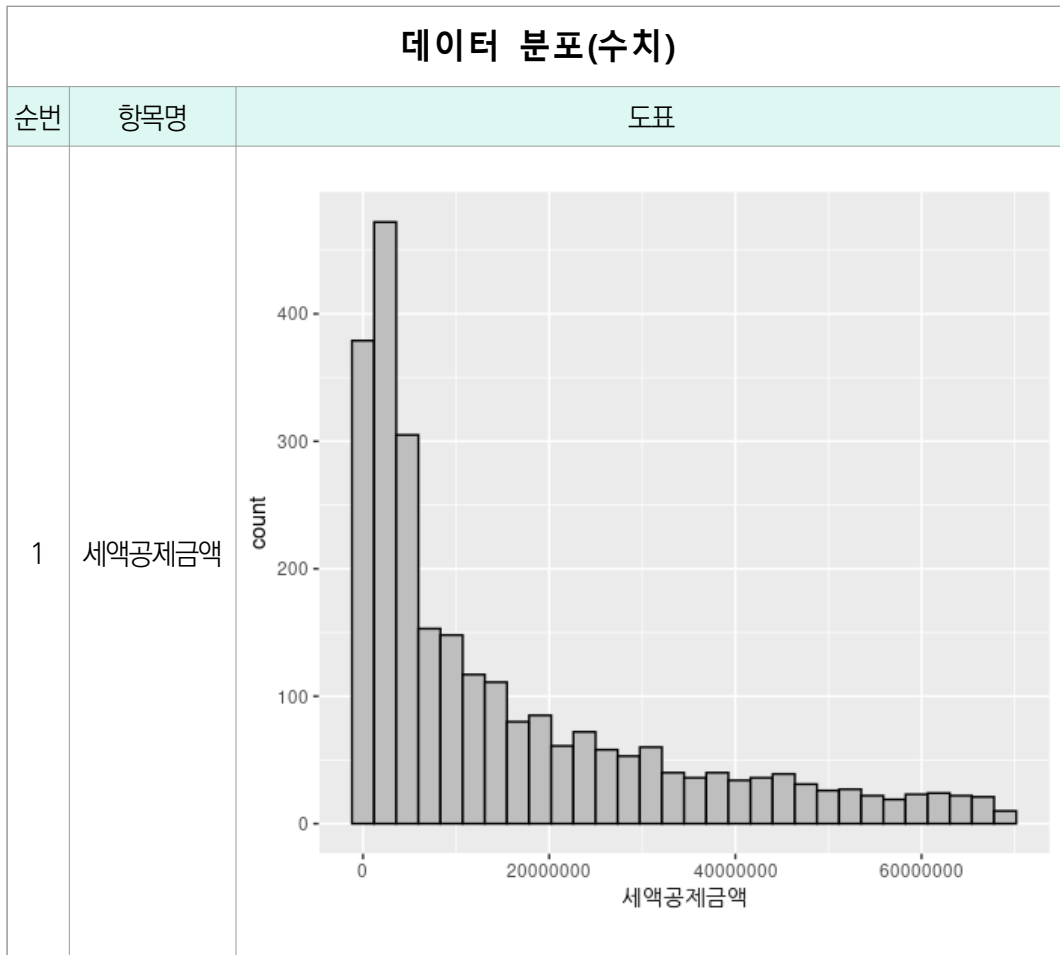
## • 부록 4

##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예시)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주 소			
데이터 명		결합 목적	
데이터 설명			
세부 목적			
이용 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데이터 명세			
번호	구 분	검 토 사 항	
1	데이터 특징		
2	데이터 생성 방법		
3	데이터 제공 방법		
4	데이터 관리 환경		

##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기관명)

순번	항목명	개인정보유형	원본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및 예시
1	과세표준금액	민감정보 / 비민감정보	12,345	랜덤라운딩 12,000







## Chapter 06

# 소득세 표본자료

1. 개요	101
2. 이용대상 및 절차	102
3. 제공자료 및 유의사항	103
4. 이용자 준수사항	104
5. 표본자료 제공항목	105
6. 서식	107





## VI 소득세 표본자료

### 1 개요

#### ■ 배경

- 국세데이터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의 공개·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세통계센터 방문 없이도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에 국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작성에 활용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정의

- 소득세 표본자료는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로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합니다.

#### ■ 근거법률

- 소득세 표본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8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및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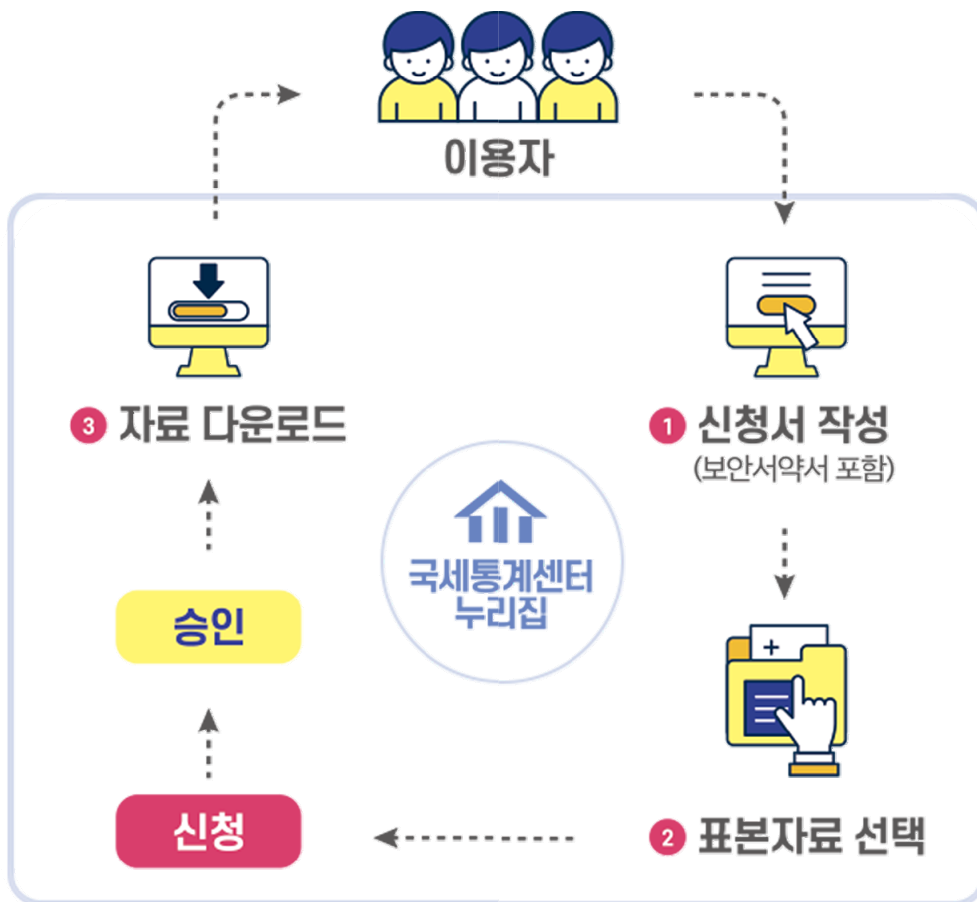
## 2 이용대상 및 절차

### ■ 이용 대상

- 소득세 표본자료는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이용 절차

- 소득세 표본자료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datalab.nt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3 제공자료 및 유의사항

#### ■ 제공자료

- 소득세 표본자료는 2018년~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국세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 소득세 표본자료는 2018~2019년 귀속분을 2022년 6월에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매년 11월에 전전년도 귀속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18~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표본자료는 모집단의 2%(전체 63만 건, 매년 약 15만건) 표본에 대하여 18개 항목을, 근로소득세 표본자료는 모집단의 1%(전체 77만 건, 매년 약 19만건) 표본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제공합니다.
- 표본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표본추출, 재범주화, 국소삭제, 부분총계 등 다양한 비식별 기법을 적용하여 익명수준으로 비식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항목〉

종합소득세 (18개)	근로소득세 (15개)
· 일련번호, 가중치, 소득분위층	· 일련번호, 가중치, 소득분위층
· 연령대, 성별, 지역, 업태, 신고서소득세신고유형, 기장의무구분	· 연령대, 성별, 지역
· 총수입합계금액, 필요경비합계금액,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금액, 소득공제합계액,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 근로소득합계금액, 근로소득공제합계금액, 과세대상소득금액, 인적공제합계금액, 소득공제합계금액,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합계금액, 소득세결정세액

## ■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표본자료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닙니다.
- 소득세 표본자료는 표본오차 및 익명처리를 통해 일부 자료가 변형되어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통계값은 통계연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표본자료는 층화추출(수정 네이만배분)이 적용된 표본자료로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가중치를 적용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 4 이용자 준수사항

- 표본자료 이용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표본자료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표본자료 이용자 준수사항



1. 표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표본자료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함
3.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
4. 그 밖에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5

## 표본자료 제공항목

## 종합소득세 제공항목



No	항목	유형	분야별
1	일련번호	문자형	표본자료의 일련번호
2	가중치	수치형	표본자료의 가중치
3	소득분위층	문자형	총급여 기준 1~45층
4	연령대	범주형	34세 이하 / 35세~44세 / 45세~54세 / 55세~64세 / 65세 이상
5	성별	범주형	남 / 여
6	지역	범주형	수도권 / 비수도권
7	업태	문자형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통신업 / 기타
8	신고서소득세신고유형	문자형	외부조정 / 자기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비사업자
9	기장의무구분	문자형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비사업자 / 해당없음
10	총수입합계금액	수치형	이자·배당소득명세서소득금액·배당액 + 사업소득명세서 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소득명세서 수입금액
11	필요경비합계금액	수치형	사업소득명세서 총 필요경비 + 근로·연금·기타소득 명세서 필요경비
12	종합소득금액	수치형	이자·배당소득명세서 소득금액 + 사업소득명세서 총 소득금액 + 근로·연금·기타소득명세서 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④-⑱」
13	인적공제금액	수치형	인적 기본공제액 + 추가공제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⑪-⑧」
14	소득공제 합계액	수치형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⑪-⑳」
15	과세표준금액	수치형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④-㉑」
16	산출세액	수치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④-㉒」
17	세액공제	수치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④-㉓」
18	결정세액	수치형	산출세액 - 세액감면액 - 세액공제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④-㉔」



## 근로소득세 제공항목

No	항목	유형	분야별
1	일련번호	문자형	표본자료의 일련번호
2	가중치	수치형	표본자료의 가중치
3	소득분위층	문자형	총급여 기준 1~112층
4	연령대	범주형	34세 이하 / 35세~44세 / 45세~54세 / 55세~64세 / 65세 이상
5	성별	범주형	남 / 여
6	지역	범주형	수도권 / 비수도권
7	근로소득합계금액	수치형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㉑」
8	근로소득공제합계금액	수치형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㉒」
9	과세대상소득금액	수치형	근로소득합계금액 - 근로소득공제합계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㉓」
10	인적공제합계금액	수치형	기본공제액 + 추가공제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㉔+...+㉓」
11	소득공제합계금액	수치형	연금보험료공제액 + 특별소득공제액 + 그 밖의 소득공제액
12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수치형	과세대상 소득금액 - (인적공제 합계금액 + 소득공제 합계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㉔」
13	근로소득산출세액	수치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6%~4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㉔」
14	세액공제합계금액	수치형	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외국납부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㉔」
15	소득세결정세액	수치형	근로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액 - 세액공제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㉔」

## 6

## 서식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표본자료 이용신청서

☐ 이용자 인적사항

이 름*		주 소	
------	--	-----	--

\*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사용 목적	
-------	--

☐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표본자료의 종류	
표본자료의 범위 (귀속년도)	

☐ 표본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 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매체에 수록	<input type="checkbox"/> 전자메일로 송부
전자메일 주소		

\* 이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희망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 이용자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표본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표본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표본자료 이용 및 정보보안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귀하는 표본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국세데이터 활용 안내서

National Tax Service



## Chapter 07

# 국세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113
2. 국세기본법시행령	117
3.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120
4.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129
5. 소득표본자료제공운영규정	139
6. 기타 법률 및 규정	145



## VII 국세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

### 1 국세기본법

2023년 4월 1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 제7항에 따라 제공된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⑩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국세기본법시행령

2023년 4월 1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 ① 법 제85조의6 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 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 ① 법 제85조의6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85조의6 제7항 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 하는 기관의 장
- ③ 법 제85조의6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 제6항”은 “법 제85조의6 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 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 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 ① 법 제85조의6 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 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 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법 제85조의6 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 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12호(2022.6.27)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세통계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통계사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세행정 정책의 수립·평가 및 조세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 또는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총계적 수량정보’를 말한다.
2. “과세정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공제·감면·비과세 금액 등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및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 나. 납세고지, 납기전징수, 징수유예, 독촉, 압류·공매, 체납처분유예 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정보
  - 다. 조사 받았거나·조사 중이거나·조사 예정인 납세자의 정보, 조사 대상 선정·계획·집행·결과·사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
  - 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등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 마. 그 밖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그를 토대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작성·보관하며 관리하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
3. “통계사무”라 함은 통계의 기획·개발, 생산·변경·중지, 품질 개선, 공표와 제공 등 통계와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4. “통계생산부서”라 함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 센터를 말한다.
  5.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작동하는 각종 전산운용체제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6. “국세통계시스템”이라 함은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국세통계생산·관리시스템”, “국세통계포털 (TASIS)” 등을 포함한다.
  7. “국세통계센터”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8. “기초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
  9. “표본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기초 자료를 말한다.
  10. “이종(異種)정보”라 함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이외 타기관의 보유 정보 (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 【통계사무의 총괄·조정】**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의 생산 및 공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통계생산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품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통계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통계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
6. 통계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통계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과의 통계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9.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계관련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타 기관 통계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2.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초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표본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결합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책무】

- ①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통계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의 통계 제출요구 및 제반 통계사무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통계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서식의 개선, 전산화 등의 노력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관련 종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 또는 통계청 등 통계유관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장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

### 제7조 【수요조사 실시】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세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정부기관 등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요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 【수요조사 결과 반영】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 생산부서의 장에게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생산부서의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선 또는 신규 공개해야 할 통계를 선정한 후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개선 또는 신규개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만족도조사 실시】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품질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만족도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선사항은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통계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만족도조사 결과와 관련



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장 통계의 생산

### 제11조 【국세통계시스템 등에 의한 생산·관리】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 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전산시스템 또는 수동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 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통계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가 국세통계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계획·예산·인력 등을 마련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사업자에게 별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 【통계의 생산·변경 등】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새로운 통계의 생산 또는 기존통계의 변경·중지·폐지를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중지·폐지할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산처리 지원】** 정보화관리관은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 및 통계생산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생산 및 전산처리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장 통계의 공표

### 제14조 【통계의 공표】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생산된 통계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시 별도의 보고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정보시스템(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서 통계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표 외에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통계의 수정】**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통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16조 【통계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명시】**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계의 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장 통계의 제공

### 제17조 【통계의 제공】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를 책자, 전산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공표된 통계를 활용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

## 제18조 【공표 외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①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외에 별도의 통계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당해 통계를 별도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
  1. 세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세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제공 요구를 받은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연구목적과 공익성을 검토하여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하며, 회신 내용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밀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에 대해서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 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전용망, 국세통계센터,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⑤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 통계의 제공 현황을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국세통계센터의 운영】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세통계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20조 【표본자료의 제공】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표본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21조 【결합 업무의 수행】

-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기초자료와 이종(異種)정보의 결합을 통한 연구·분석,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결합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6장 비밀보호

#### 제22조 【비밀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업의 영업상 기밀 등 납세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제85조의6(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관련 종사 직원 및 통계관련 종사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등에 의한다.

**제23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6. 27. 국세청훈령 제2512호)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4

##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507호 (2022년 6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세통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통계센터”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 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3. “통계자료”란 법 제85조의6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4. “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로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5. “분석결과물”이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물을 말한다.
6. “통계생산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 센터를 말한다.
7. “비식별화”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종(異種)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11. “결합물”이란 가명처리된 과세정보와 이종정보를 결합한 결과물을 말한다.
12. “재식별”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13.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익명처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제4조 【국세통계센터의 설치】** 국세통계센터는 국세청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소속 기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국세통계센터의 기능 및 역할】** 국세통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2. 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간 결합 서비스 제공
3. 기초자료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상담
4.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초자료의 분석 지원

5. 기초자료의 가명처리·익명처리
6. 기타 국세통계센터의 기초자료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 제2장 이용 대상 및 제공 범위

### 제6조 【이용 대상】

- ①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대상은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및 영 제6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 ② 영 제6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서 학회는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를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이용대상자는 각 기관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제7조 【제공 범위】** 국세통계센터에서는 국세통계연보의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이용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이용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기초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
4. 기초자료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5.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과물이 도출되어 제공 거부함이 타당하거나 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공 거부함이 타당하거나 또는 제공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제3장 이용 신청 및 절차 등

#### 제8조 【이용 신청】

-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대상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상담을 제공한다.
- ②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서 또는 제6조제4항의 각 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국세통계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 【이용 승인 결정】

- ① 이용 신청에 대한 자료의 제공 여부 등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관 통계생산 부서의 장과 국세데이터담당관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관 통계생산 부서의 장이 다수이어서 서로 협의가 어렵거나 국세데이터담당관과 의견이 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②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심의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또는 이용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 기간(이용 승인 시)



2. 거부 사유(이용 거부 시)
3. 기타 참고사항

#### 제10조 【이용 기간】

- ① 이용자는 4주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1회에 2주의 범위에서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기간 만료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이용 변경신고】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자료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2. 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
  3. 그 밖의 변경 사항
- ②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9조 (이용승인결정)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제12조 【분석결과 반출】

- ① 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 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분석결과물의 반출 신청에 대해 개인식별 가능성, 연구목적 부합성에 관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③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
  - 2. 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
  - 3. 기타 참고사항

### 제13조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 종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용자의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종료된 경우 국세통계센터에 수록된 반출신청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이용기간 종료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 국세통계센터 저장 공간을 감안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장 자료의 결합 등

### 제14조 【자료의 결합】

-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기초자료와 이종정보의 결합을 통한 연구·분석,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가명처리된 이종정보와 결합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그 외 결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1. 국세청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
  - 2. 국세청 결합전문기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

## 제5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15조 【이용자 준수사항】**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는 반드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2. 기초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기초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연구 중에 있는 중간 분석결과물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이용 종료 후 반출 승인 받은 최종 분석결과물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5.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 【이용 중단 및 제한】

-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자가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세통계센터 운영·관리

### 제17조 【국세통계센터의 운영】

-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산장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 ②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기초자료를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 【보안관리】

- ①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세통계센터는 인터넷서비스망, 업무전산망 등 외부전산망과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장 국세통계센터심의회

**제19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설치】**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심의회를 둔다.

1. 국세통계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센터 이용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
3. 기초자료의 비식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또는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20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구성】**

- ①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는 위원장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세데이터담당관과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통계생산부서의 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임명한 10명 이내의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 법률·통계 및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 ②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과 해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원을 대체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

-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 ①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24조 【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07호, 2022. 6. 24.〉

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 5

## 소득표본자료제공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515호 (2022년 7월 1일)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표본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자료”란 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
2. “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
3. “표본추출”이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익명처리”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더 이상 특정 납세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표본자료의 대표성”이란 표본자료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6. “표본자료의 보안성”이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정도를 말한다.

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8. “재식별”이란 표본자료를 분석·가공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표본자료의 작성

**제4조 【표본작성 범위 등】**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표본자료의 종류와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표본자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 【표본추출】

-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할 때에는 층화추출 등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본추출 전문가 등에게 연구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 【익명처리】

- ① 제5조에 따라 추출된 표본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명처리 전문가 등에게 연구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표본자료의 검증】**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그 대표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하여 표본자료심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제3장 표본자료심의회

**제8조 【설치】**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작성 및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표본자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1.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표본자료의 표본추출 방법에 관한 사항
3. 표본자료의 익명처리에 관한 사항
4. 표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표본자료의 작성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 【구성】

- ①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심의회 의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내부위원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소득세과장, 원천세과장
  2. 외부위원 : 표본추출,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③ 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소속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때 외부위원은 내부위원을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과 해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원을 대체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세청장은 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 ① 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경비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표본자료 제공 절차

**제15조 【신청 대상】**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누구나 표본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6조 【신청 방법】

- ①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표본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② 이용자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표본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 【제공 기한】

- ① 표본자료 제공 기한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본자료 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8조 【제공 방법】** 표본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자매체에 수록
2. 전자메일로 송부

## 제5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 제19조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 규정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법 제85조의6제9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국세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표본자료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의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제공 중단 및 제한】

- ① 국세청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신청한 표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표본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1조 【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 기타 법률 및 규정

## 가. 통계법

##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추는 것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 ②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 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보고서
  -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7호, 2022.12.3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3. “결합키연계정보”란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4.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5.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 제3조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 제4조 【보호위원회의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기관리기관 간 결합 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시스템 또는 제3항의 지원센터를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조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
  2.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3.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전 보호위원회등에게 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
  2.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⑦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등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변경된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결합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 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①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를 다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 제8조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결합기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 【가명정보의 결합】

- ①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기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기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 ② 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결합기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기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 결합전문기관이 별표1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 조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의 결합 또는 다른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결합 등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 ① 결합기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결합신청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 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등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29조의3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⑤ 결합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키등은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신청자가 분석을 마친 경우 모의결합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 ①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전문가는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 가. 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 나. 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2. 결합전문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를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할 것
  3. 결합전문기관에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4.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관리할 것
- ③ 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자가 제1항의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 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 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11조 【반출승인】

-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정을 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④ 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합 전 가명처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3. 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제12조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 ①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제9조의4제1항의 자체결합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자료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기록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결합기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와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상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반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영 제2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13조 【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7호, 2022. 12.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① 신용정보회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제공·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 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제공·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

-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의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제공·처리·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 인력·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추는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⑦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2.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⑧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가목 본문에 따라 동시에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34조의5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①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 등은 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및 파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1. 가명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가명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가명정보 접근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정보의 분리에 관한 사항
  - 5. 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사.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

- ①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② 영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 인력·조직 및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 ③ 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
- ④ 영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 등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 ⑧ 금융감독원장은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영 제22조의4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이해관계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⑩ 금융감독원장은 제8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⑪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43조의7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영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사항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 [별표 8]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제43조의7 관련)

### I.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1.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가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목적, 처리 방법, 처리 일시를 기록하여 가명정보가 파기된 이후 3년 이상 보관하고, 처리 기록에 대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II. 관리적 보호조치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가 저장 또는 처리되는 시스템·단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 5.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방지 및 재식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6.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접근하는 취급자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명정보보호교육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1.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3. 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제1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정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따라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
  - 2.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가명정보 활용목적, 가명정보 이용·보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공할 것
  -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 4.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 5.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중단 및 파기를 요청하는 등 재식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Ⅲ. 보호대책의 준용

- ①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는 별표 3의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준용한다.
- ②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기준과 별표 3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이 안내서의 내용은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발간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세데이터 활용 안내서

발행일자 : 2021년 5월

개정일자 : 2023년 11월

발행처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집필·편집 : 국세데이터담당관 배상록

서 기 관 임상현

행정사무관 이준학

통계사무관 유혜경

통계사무관 김경록

국세조사관 유은주

국세조사관 김부일

국세조사관 고덕상

국세조사관 정상원

행정사무관 장상우

행정사무관 김선봉

국세조사관 문영규

국세조사관 이진희

국세조사관 조진용

국세조사관 박선영

전화번호 : 044-204-2363~2364, 044-204-2368~2369

044-204-2373~2374, 044-204-2378~2379

044-204-2383

본 안내서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